

기본연구 2017 - 0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사업별 예산구조 분석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최길수

연구책임

• 최길수 / 상생협력실장

기본연구 2017-0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사업별 예산구조 분석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발행인 박재묵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17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나은인쇄문화사 TEL 042-252-4103 FAX 042-252-410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1장 서론	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장 이론적 논의	11
1절 인구구조변화의 파급효과	11
1. 인구학적 파급효과	11
2. 경제적 파급효과	12
3. 사회적 파급효과	13
2절 인구구조변화와 도시문제	16
1.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경영능력 저하	16
2. 인구감소에 따른 기존시가지의 활력성 저하	16
3.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도시시설의 수요변화	17
4.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대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변화	17
5.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중소도시 생존에 영향	18
3절 고령사회와 지방재정 관계	19
1.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9
2. 고령화와 지방재정 간의 상관관계	20
3장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정부 계획	25
1절 한국과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추이	25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25
2.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27
2절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계획	30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0
2.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정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31

4장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예산 분석	37
1절 특·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예산 분석	37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37
2. 특·광역시 간 비교 분석	38
2절 대전광역시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석	46
1.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현황	46
2.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사업예산 분석	50
3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65
1. 특·광역시의 시사점	65
2. 대전광역시의 시사점	66
5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71
1절 단기적 추진 과제	71
1. 사업주체별 재정분담의 명확화	71
2.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	72
3. 사업집행에 대한 점검체계 강화	73
4. 사업예산의 성과관리체계 확립	76
2절 중장기적 추진 과제	78
1. 저출산 대책 분야	78
2. 고령화 대책 분야	80
3.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	82
6장 결론	87
1절 요약	87
2절 정책제언	89
참고문헌	95

표 차례

[표 2-1]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동	12
[표 2-2] 건강보험료의 수입 및 지출 증가율 전망	14
[표 3-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대전/전국 비교)	27
[표 3-2] 대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비율	28
[표 3-3]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실행계획의 공통분야 주요내용	32
[표 3-4]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실행계획의 자체분야 주요내용	33
[표 4-1] 제3차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액 추계	37
[표 4-2] 특·광역시별 자체사업 예산 총계(2013~2017년)	39
[표 4-3] 특·광역시별 저출산 분야(대책)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41
[표 4-4] 특·광역시별 고령화 분야(대책)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43
[표 4-5] 특·광역시별 성장동력 분야(대응기반강화)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45
[표 4-6]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역 현황(2013~2017년)	47
[표 4-7]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사업(2013~2017년)	49
[표 4-8]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총예산(2013~2017년)	50
[표 4-9]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공통사업 예산(2013~2017년)	51
[표 4-10]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공통사업 예산(2013~2017년)	53
[표 4-11]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공통사업 예산(2013~2017년)	55
[표 4-12] 대전광역시 성장동력 분야 공통사업 예산(2013~2017년)	57
[표 4-13]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58
[표 4-14]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60
[표 4-15]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62
[표 4-16] 대전광역시 성장동력 분야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64
[표 5-1]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부문별 주요 사업예산(2013~2017년)	75
[표 5-2]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행계획 성과지표 작성(예시)	76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준거틀	7
[그림 3-1] OECD 회원국의 출산율 및 첫 출산연령	25
[그림 3-2] 우리나라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6
[그림 3-3] 노인인구 비율 추이 및 예측	27
[그림 3-4]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8
[그림 3-5] 대전의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 추계(2010-2040)	29
[그림 3-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30
[그림 3-7]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	31
[그림 5-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73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의 속도가 빨랐던 만큼 고령화의 속도 또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국회예산처, 2009: 3).¹⁾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노동생산성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한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증가되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의 상승, 소비자 위축과 정부의 재정수지의 위기는 총체적으로 잠재성장을 둔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0: 6).²⁾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 인구수는 2010년 536만명에서 2026년에는 2배인 1,022만명, 그리고 2040년에는 3배인 1,54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료 및 생활보장이 더 필요한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은 2010년 95만명에서 2050년 613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³⁾

1)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용어는 사회전반이 고령화·노후화되어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고령사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 한국의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 15~49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06명으로 감소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1.3명 미만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21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 10).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20년 377천명, 2050년에는 226천명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저출산 추세가 유지될 경우 2100년까지 한민족 총 인구는 2010년 인구 4,887만명의 50.5%인 2,468만명으로 축소되어 OECD 선진국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단지 3개국만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강성원, 2010: 2).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인식하여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장기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계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2010년까지, 제2차는 2011~2015년, 제3차는 2016~2020년까지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정부(지방정부 포함)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분석해 보면, 종합적이기 보다는 특정영역(특히 저출산 대책)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저출산 분야는 보육지원 분야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 부문은 기초노령연금 분야에 집중돼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5년 후의 재정 투자규모는 약 11.9조원이 증가(2015년 32.6조원에서 2020년에는 44.5조원 규모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 재원에 대하여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① 국가재정운용계획·매년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기존 지출 구조조정, 과제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 마련, 세출 구조조정, 기존사업 지출 효율화 추진), ②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③ 출산·고령

3) 노인인구의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25년 20%, 2050년에는 40%에 도달하여 유럽국가와 일본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대한민국정부, 2010: 4).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인구가 7%)로 접어들어,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인구가 14%), 2026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20%)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소요연수는 65세 인구가 7%~14%까지 이르는 기간이 18년, 14%~20%까지 걸리는 기간은 8년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소요연한이 가장 짧다. 2009년 UN보고에 의하면 2050년에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의 기준으로 일렬로 세워 단순히 균등하게 2등분하는 연령)’이 53.7세로 2009년 37.3세에 비하여 16.4세가 증가할 것이며,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위연령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민재, 2009: 9).

사회 대책에 대한 장기적 투자 필요성 및 재원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지속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도 최근 5년(2013년~2017년) 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자체사업에 투자된 비용이 대략 793,711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예산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저출산·고령화가 정부(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으나, 특정 지방정부의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구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투자되는 예산구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방재정 및 예산의 관점에서 대전시광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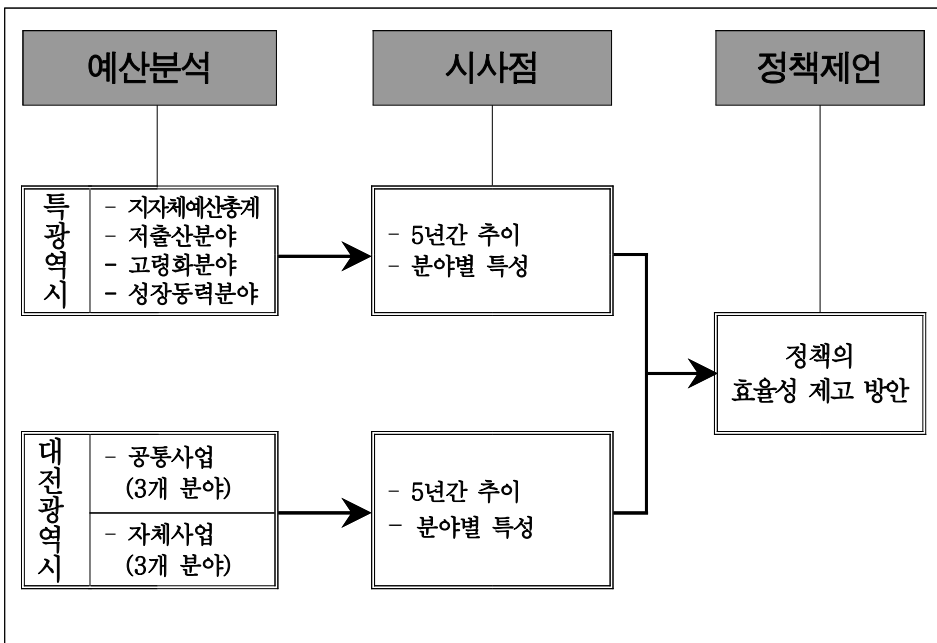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추세, 제문제,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지출 구조 분석,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업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저출산·고령화가 미치는 파급효과, 저출산·고령화의 전반적 추세(세계적 추세, 국내 추세, 대전광역시 추세)에 대해 검토해 본다. 또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 최근 5년(2013~2017년) 간의 지출 구조에 대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자되는 최근 5년간의 예산지출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지방재정 및 예산의 관점에서 대전시광역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23개 OECD 국가를 가장 큰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대책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시도자치단체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필요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우선,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OECD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등에서 발간하는 통계와 연구자료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전국 8개 특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예산규모는 각각의 시행계획에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한다.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와 시행계획을 검토한다. 둘째, 문헌고찰은 이론적 배경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도시문제,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저출산·고령사회와 지방재정 관계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대전시의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

획] 등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다. 셋째는 최근 5년간 대전시의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나타난 사업별예산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지방재정 및 예산의 관점에서 대전시광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1-1]과 같은 연구의 준거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준거틀



2장

이론적 논의

1절 인구구조변화의 파급효과

2절 인구구조변화와 도시문제

3절 고령사회와 지방재정 관계

2장 이론적 논의

1절 인구구조변화의 파급효과

1. 인구학적 파급효과

초저출산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장래인구는 필연적으로 급격히 감소된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에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되어, 2050년에는 4,23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임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100년에 2,12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최길수, 2014 : 41, 재인용).

한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에 3,619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 2,242만명, 2100년에는 944만명(1/4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인구(65세이상)는 2008년 5백만명(2010년 536만명)에서 2018년 7백만명, 2030년에 1,181만명, 2050년 1,616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새로운 노인인구가 출생아수를 상회하기 시작하고, 2016년에는 유소년인구(654만명)가 노인인구(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최길수, 2014 : 41, 재인용).

또한, 인구고령화 수준(65세 노인비율)은 2050년에 38.2%, 2100년에는 46.9%로 급상승 하여, 2040년 전후 세계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사회(노인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로 이행하는데 18년이 소요되어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고령화의 현상으로 인해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길수, 2014 : 41, 재인용).

[표 2-1]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동

(단위: 천명,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총인구	48,875 (100.0)	49,277 (100.0)	49,326 (100.0)	49,108 (100.0)	48,635 (100.0)	47,734 (100.0)	46,343 (100.0)	44,521 (100.0)	42,343 (100.0)
유소년인구 (15세미만)	7,907 (16.2)	6,733 (13.7)	6,118 (12.4)	5,778 (11.8)	5,525 (11.4)	5,231 (11.0)	4,777 (10.3)	4,220 (9.5)	3,763 (8.9)
생산가능인구 (15-64세)	35,611 (72.9)	36,163 (73.4)	35,506 (72.0)	33,562 (68.3)	31,299 (64.4)	28,954 (60.7)	26,525 (57.2)	24,503 (55.0)	22,424 (53.0)
노년인구 (65세이상)	5,357 (11.0)	6,381 (12.9)	7,701 (15.6)	9,768 (19.9)	11,811 (24.3)	13,549 (28.4)	15,041 (32.5)	15,798 (35.5)	16,156 (38.0)
총부양비	37.2	36.3	38.9	46.3	55.4	64.9	74.7	81.7	88.8
유년부양비	22.2	18.6	17.2	17.2	17.7	18.1	18.0	17.2	16.8
노년부양비	15.0	17.6	21.7	29.1	37.7	46.8	56.7	64.5	72.0
잠재적부양비	6.6	5.7	4.6	3.4	2.6	2.1	1.8	1.6	1.4

자료: 최길수(2014: 42), 재인용.

2. 경제적 파급효과

저출산·고령화로 저축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스톡 증가율이 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5.8%에서 2041-20150년 1.6%로 둔화 감소될 전망이다. 최근의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4.8%에서 2041-2050년에 1.2%로 둔화되고 그 이후 2075년까지 0.7-0.9%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2050년까지 GDP 증가율은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 피부양 인구 비율의 빠른 상승 등 고령화 효과로 인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 될 것으로 보인다(최길수, 2014 : 42, 재인용).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2,619만명, 총인구의 73.4%)으로 감소, 핵심근로계층(25~49세)은 2007년 2,06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1.6 수준 대에 접어든 결과, 20년 후인 2000년부터 젊은층 노동력이 감소하기 시작되었으며, 2002년 이후 1.2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의 효과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

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현재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약 25% 미만인데 비해 2050년에는 그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핵심노동력(25~49세)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66%에서 2050년에 4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통제할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 1.1%로 감소할 전망이다(최길수, 2014 : 43, 재인용).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세입기반인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여 연금, 의료비 등 복지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2020년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로 총지출은 37%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3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복지제도에서 공적연금, 공적의료, 노인복지, 기초생보 등의 지출소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출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며, 재정상태를 안정화 하고자 한다면 조세부담(국민부담)의 대폭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즉, 인구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인당 조세부담은 2050년에 현재보다 85~106만원, 일인당 국민부담은 현재보다 130~150만원 정도 상향될 것이다(최길수, 2014 : 43, 재인용).

3. 사회적 파급효과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등 복지부담 급증으로 인하여 세대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잠재성자를 하락과 함께 사회보장 재정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최길수, 2014 : 43, 재인용).

저출산의 영향으로 2055년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수급자수보다 적어질 전망이다이며, 제도부양비(가입자대비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08년에 10.3%이나,

제도가 성숙하고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5년에 119.7%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60년 보험료 수입은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의 국고보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최길수, 2014 : 43, 재인용).

[표 2-2] 건강보험료의 수입 및 지출 증가율 전망

(단위: 억원)

연도	전체수입	증가율	전체지출	증가율	당기수지
2011	314,254	-	364,039	-	-49,785
2015	397,026	4.81%	476,831	6.47%	-97,805
2020	480,279	4.90%	630,244	5.42%	-149,965
2025	598,737	4.52%	807,259	4.91%	-208,522
2030	745,570	4.32%	1,020,540	4.797%	-274,970

자료: 최길수(2014 : 44), 재인용.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와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는 적용인구수 차이가 매년 벌어져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전체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다. 보험료적자가 2011년 9.3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으로 급격 증가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적자는 2030년 3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민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2017년에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매년 8%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최길수, 2014 : 43, 재인용).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생아수가 적은 지역에서 학교통폐합이 불가피하나 지역중심교육의 중요성 무시 등에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수요의 감소로 교원수급조정이 필요하고, 대학의 미충원 증가로 대학가의 슬

림화(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및 그로 인한 내실 있는 고등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하게 된다. 출산율 감소는 청년인력 감소현상을 유발하여 병역수행가용자원의 감소를 초래한다. 현역가용자원은 2010년 32만명에서 2020년 29만명, 2025년에는 21만명(2010년 규모의 66%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최길수, 2014 : 44, 재인용).

마지막으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가족분화가 더욱 촉진되고, 특히 노인부부 및 노인단독 가구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의 사적 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조차 어렵게 하는 사회·문화·경제적 여건 속에서 일종의 ‘강제된 선택’의 결과이다. 한국 여성들은 평균 2.3명의 자녀를 두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합계출산율이 1.0명에 근접하는 저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최길수, 2014 : 44, 재인용).

2절 인구구조변화와 도시문제

인구저성장 및 감소, 고령화, 독신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도시경제, 주택 및 기반시설 수요, 도시토지이용에 변화를 유발한다. 물론 도시마다 인구구조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있어, 도시간 영향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과제가 될 것이다.

1.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경영능력 저하

인구의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는 도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보다 주로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먼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총부양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를 위해 지급되는 각종 연금과 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비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한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 전반적인 도시 관리능력은 저하될 것이다(최길수, 2014 : 45, 재인용).

2. 인구감소에 따른 기존시가지의 활력성 저하

인구의 저성장 또는 감소는 도시의 전체적인 토지이용수요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수요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는 주택 및 도시용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줄어들어 기성시가지의 정비나 재개발 등이 부진하여 현재보다 도시환경이 노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도시기능 이용계층이 줄어들어 공장, 공공편익시설 등을 유지하기 어려워 빈 건물로 남겨나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상태가 늘어날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가계소비지출도 감소하게 되며, 특히 그동안에도 대형판

매 점포 등이 교외화 하면서 기능이 빠져 나가는 기존 시가지의 중심상업지구와 근린상업지구의 상점가는 점점 더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최길수, 2014 : 45, 재인용).

3.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도시시설의 수요변화

저출산에 따라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시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규교육시설이다. 각급 학교의 폐쇄사례가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반면에 유년층의 경우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등 교육복지시설은 지금도 아직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맞물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계층을 위한 주거, 의료, 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재교육시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에도 노인복지시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맞물려 향후에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최길수, 2014 : 45-46, 재인용).

4.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대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변화

노인가수와 독신가구의 증대는 편리성과 젊음에 대한 추구로 도시지역으로의 회귀경향도 커져 갈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시가지가 노후화하고 상업지역의 활력이 저하되지만 노인과 독신계층의 도시회귀는 하나의 기회요소가 될 수 있다. 반면에 특정계층이 도심에 집중됨으로써 독특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나, 커뮤니티로서 구성원간의 친밀성은 저하될 수 있다(최길수, 2014 : 46, 재인용).

5.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중소도시 생존에 영향

도시유형별로 그 영향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상황을 낳게 된다.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기존의 인구가 2-3만인 이하의 읍지역들은 점차 최소한의 필요한 공공시설, 근린편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구가 20-30만 명 이하인 도시들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종합병원, 문화회관, 대형판매점 등 상위도시기능을 더욱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들 도시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보다 큰 도시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최길수, 2014 : 46-47, 재인용).

3절 고령사회와 지방재정 관계

1.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는 경제사회의 저성장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경제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최웅선, 2016: 47, 재인용). 우선, 고령화는 저성장으로 이어져 조세수입 감소 및 조세부담 증가를 가져온다.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은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이는 지방정부가 만성적인 재정압박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저성장은 사회적으로 복지수요를 증대시킨다. 복지수요는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이게 한다. 즉,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교육시설, 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자녀양육을 위한 탁아소와 유치원 등 사회복지시설 수요는 증대할 것이다. 그에 반해 유소년 인구와 학령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폐교시설을 확대시키고 있다(최웅선, 2016: 47).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환경 특성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재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최웅선, 2016: 48, 재인용). 즉, 고령화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 지방재정 세입, 지방재정 세출, 그리고 지방재정의 위기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먼저, 고령화가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사회복지재정부담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증대되어, 사회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사무 이양과 여러 무상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행·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웅선, 2016: 48, 재인용).

고령화가 지방정부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고령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감소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재산 관련 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수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령화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시장 침체를 유발함으로써 세수확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최웅선, 2016: 48, 재인용). 고령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입이 감소하게 되면, 중국에는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최웅선, 2016: 48, 재인용).

고령화가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세원별 세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최웅선, 2016: 49, 재인용).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소득과세, 소비과세, 거래과세, 보유과세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방 재정 세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최웅선, 2016: 49, 재인용). 특히 거래과세와 보유과세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웅선, 2016: 49, 재인용).

지방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복지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인구이동 및 출산율 등의 이유로 인해, 이러한 재정지출은 지역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최웅선, 2016: 49, 재인용).

2. 고령화와 지방재정 간의 상관관계

고령화는 거시적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 주장이다. 고령화는 고령자를 위한 사회부담률의 증가, 저축률과 소비 및 투자의 감소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순은, 2017: 17, 재인용). 같은 맥락으로 고령화는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령자가 되면 은퇴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다. 인구의 감소에 따라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소득세나 재산세의 감소로 이어진다.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의 감소도 부가가치세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에 주어지는 몫도

작아진다. 이처럼 고령화율과 지방재정과의 관계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김순은, 2017: 17). 반면 보건, 의료, 복지, 주거, 교통 등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커진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는 또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커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조금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비중이 높아진다(김순은, 2017: 18, 재인용). 중앙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에게 대응자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화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김순은, 2017: 18).

3장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정부 계획

1절 한국과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2절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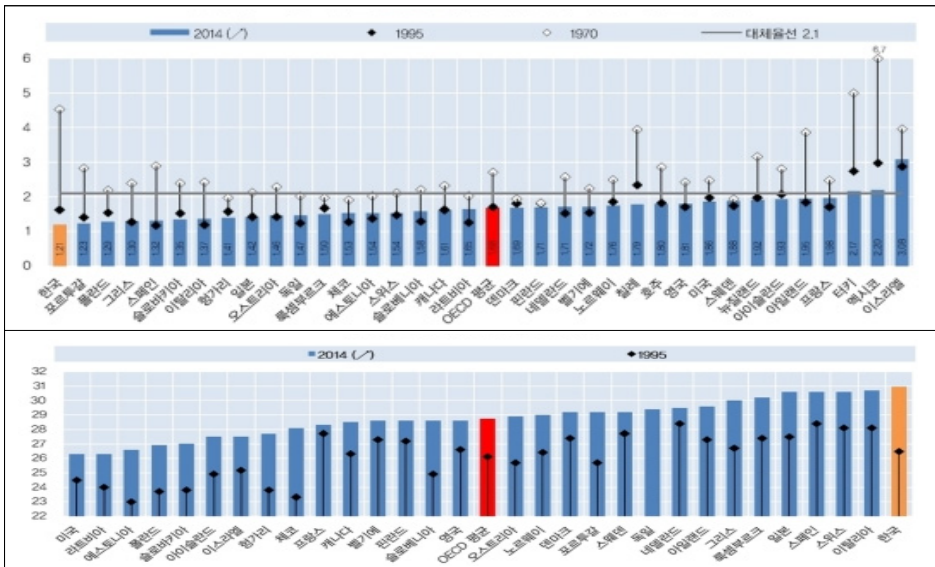
3장 저출산 · 고령화 현상과 정부 계획

1절 한국과 대전광역시 저출산 · 고령화 추이

1. 한국의 저출산 · 고령화 추이

한국의 여성 1인당 자녀 수는 1.21명(2014)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OECD 전체적으로는 1970년 2.7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여성의 첫 출산연령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해(지연돼) 왔는데, 한국은 1995년 26.5살 이었던 것이 2014년 31.0살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 출산하는 국가이다(박영삼,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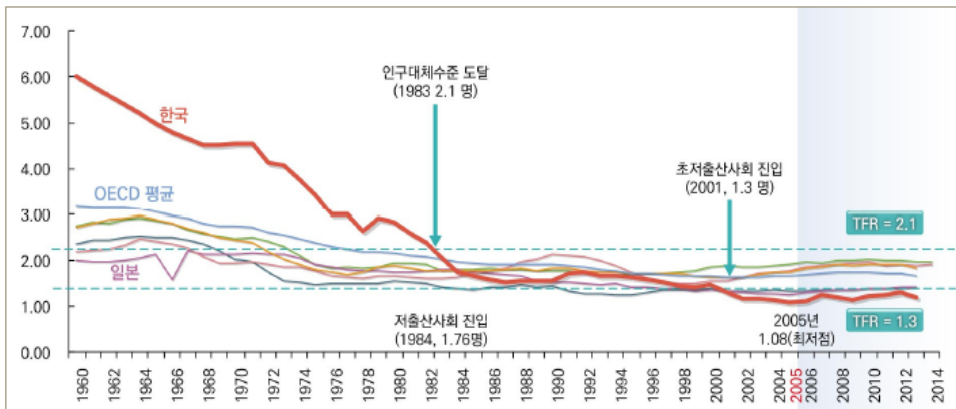
[그림 3-1] OECD 회원국의 출산율 및 첫 출산연령



자료 : 박영삼, 2016.

한국은 30년 이상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 미만)이 지속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가임기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이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2.06명 이하)으로 감소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미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달리,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은 40여년에 걸쳐 3.65명(1960)에서 1.63명(2002)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1.7명 수준 유지하고 있다. OECD에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한국 포함)이나,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현상에 탈피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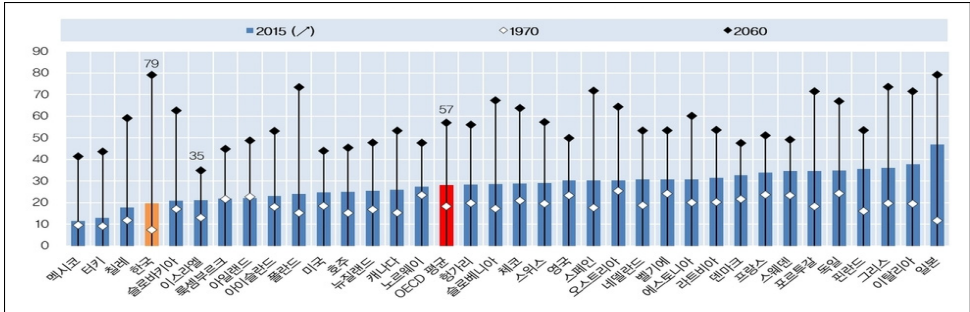
[그림 3-2] 우리나라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OECD Family Database, 2015.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20~64살 성인 인구 대비 65살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4년 현재 20%로 OECD 평균 28%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대로 갈 경우 2060년 한국의 같은 상대적 노인인구 비율은 79%에 달해 일본과 함께 OECD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영삼, 2016).

[그림 3-3] 노인인구 비율 추이 및 예측



자료 : 박영삼, 2016.

2.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2015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1.21명)대비 2.5% 증가하였으며, 2015년 전국 출생아수는 438,700명으로 전년 대비 3,300명(0.8%) 증가하였다. 대전광역시의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 평균(1.24명)을 상회하고, 특·광역시 중 세종(1.90명), 울산(1.49명)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15년 대전시의 출생아 수는 13,800명으로 전년 대비 200명(-1.4%) 감소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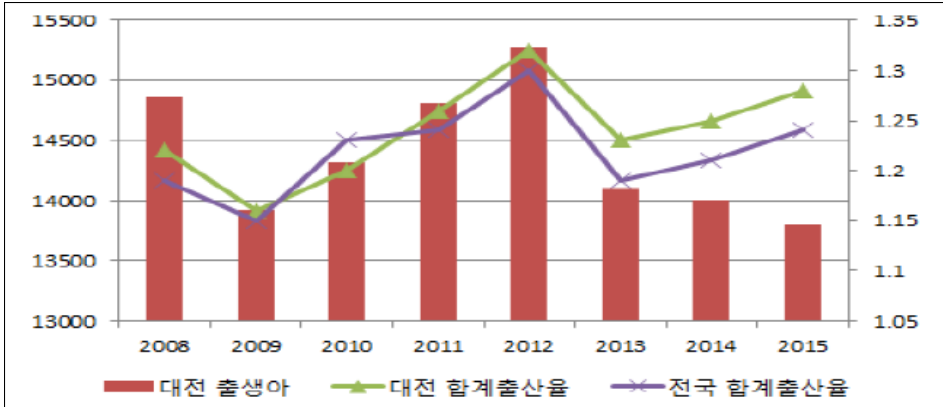
[표 3-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대전/전국 비교)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전 출생아(증가율)	14,315 (2.9%)	14,808 (3.4%)	15,279 (3.2%)	14,099 (△7.7%)	14,000 (△0.7%)	13,800 (△1.4%)
대전 인구	1,503,664	1,515,603	1,524,583	1,532,811	1,531,809	1,518,775
대전합계출산율	1.20	1.26	1.32	1.23	1.25	1.28
전국합계출산율	1.23	1.24	1.30	1.19	1.21	1.24

자료 : 통계청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시도별 출생아수(2016년 2월 잠정치)

[그림 3-4]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172.

대전광역시의 고령화 추이는 해를 거듭할 수록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8년 8.05%인 대전시 노인 인구는 매년 평균 0.3%이상 증가하고 있어, 2020년 12.9%, 2030년 21.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향후 30년간 전국 평균 4.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0년 내에 노인 인구가 유소년인구 보다 많은 인구 역전현상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인구변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172-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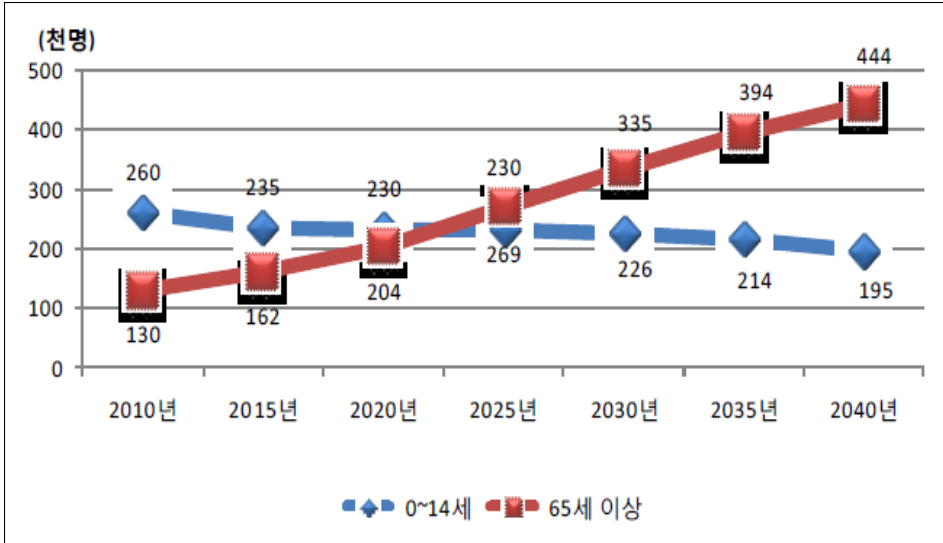
[표 3-2] 대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비율

(단위 : 명, %)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전인구	1,480,895	1,484,180	1,503,664	1,515,603	1,524,583	1,532,811	1,531,809	1,518,775
노인인구	119,22	124,520	130,245	135,740	142,979	150,651	158,329	165,528
노인비율	8.05	8.39	8.66	8.96	9.38	9.83	10.33	10.9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3-5] 대전의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 추계(2010-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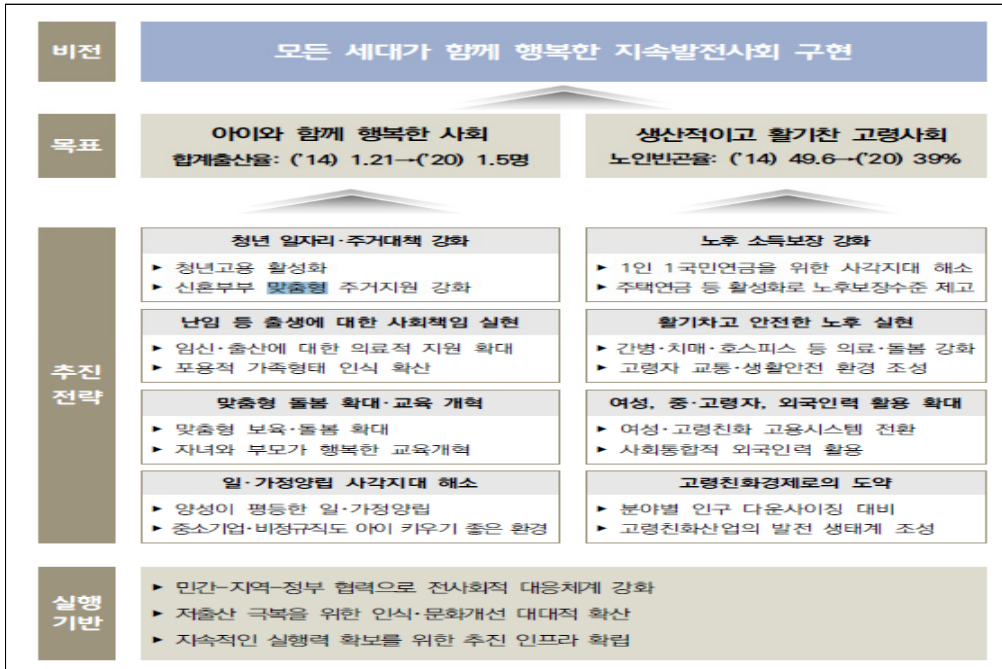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0-2040.

2절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계획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미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고령사회 대응은 소득건강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의 협력 및 장기 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강화하였는데, 비전체계를 보면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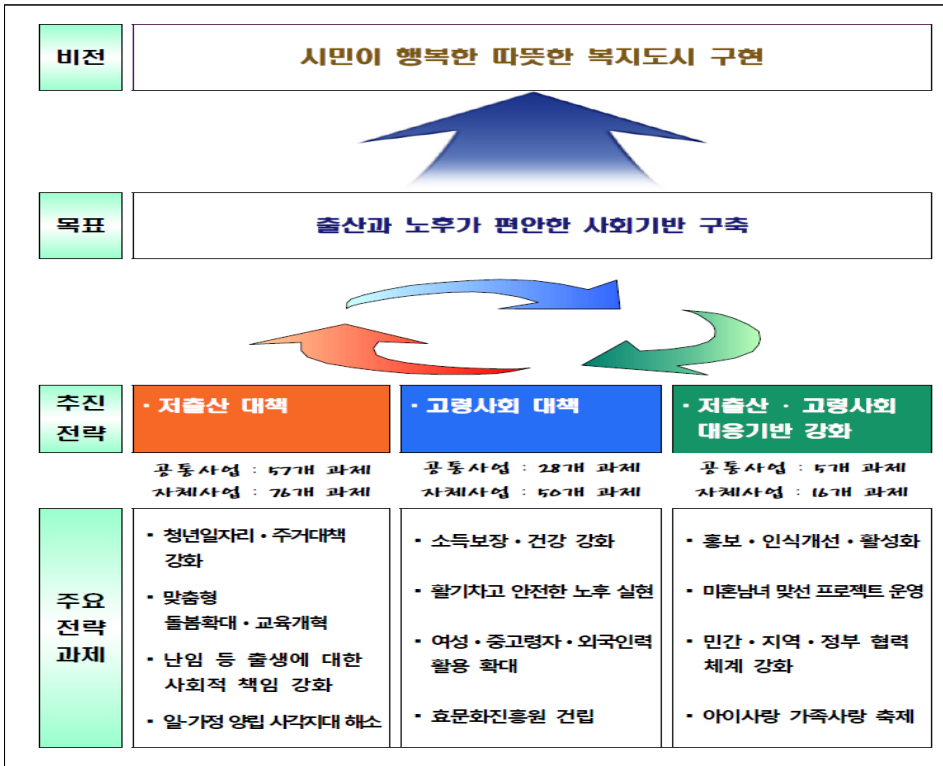


2.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정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1) 수립배경 및 2016년 정책 방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⁴⁾ 의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16~2020)에 따라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림 3-7]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 178.

4)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2016년 저출산·고령화 정책 방향은 ① 저출산·고령 사회에 성공적 대응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활력 있는 선진 도시 지향, ② 각 분야 과제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보완하는 맞춤형 선순환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 ③ 가족친화 문화 확산, 보육시스템 개선, 고령자 고용 등 기업·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책임의식 확산, ④ 사회 각 분야의 영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 등이며(대한민국정부, 2016: 177), 추진체계는 [그림 3-7]과 같다.

2) 2016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은 3대 공통분야(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고령사회 기반강화)와 3대 자체분야(출산이 행복한 수범도시 육성, 안정된 생활·건강한 노력·활기찬 노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3]와 [표 3-4]과 같다.

[표 3-3]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실행계획의 공통분야 주요내용

분야	주요내용
저출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대전일자리 종합박람회 개최,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Good-Job 청년인턴십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난임부부 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 내실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강화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 보육·교육비지원확대,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 초등학교 종일돌봄교실 운영, 이웃간 돌봄 나눔사업 활성화, 사교육부담 경감, 공공 어린이집 확충(기능보장), 보육돌봄 서비스(인건비) 지원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 스마트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분야	주요내용
고령사회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건강 강화 : 기초연금 내실화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노인구강검진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효문화진흥원 건립, 노인 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 :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립,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개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
대응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기회 제공,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홍보 프로그램, 아빠 요리교실 및 부모교육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 179-180, 재구성.

[표 3-4]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실행계획의 자체분야 주요내용

분야	주요내용
출산이 행복한 수범도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임신·출산부담 경감 :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지원금,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중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허니문 베이비 축하나눔 - 다양한 가족, 아동·보육·돌봄·공교육 강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민원상담창구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선도활동 강화, 청소년 안전시민순찰대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생일맞이 직원 구청장과의 간담회 개최, 동구청 가족 사랑의 날 운영, Family Day 운영, 통근버스 이용 임신부 직원 배려사업,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지원,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안정된 생활,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소득보장·건강 강화 :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꿈나무지킴이 사업, 시노인복지관 청춘카페 운영, 출산장려를 위한 시니어 교육 및 취업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시니어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경로목욕권 지급, 유산균 음료 배달, 경로당 쌀 지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 -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 : 여성 취 · 창업박람회 개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운영, 심통방통(心通旁通) 내 짝을 찾아라 - 홍보·인식개선·활성화 : 출산장려 언론캠페인 등 홍보, 다자녀 가정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서람이 자치대학 운영, 가족행복 사진 공모전, 아이사랑 가족사랑 축제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 180-181, 재구성.

4장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예산 분석

1절 특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예산 분석

2절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예산 분석

3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4장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예산 분석

1절 특·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예산 분석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분석해 보면, 종합적이기 보다는 특정영역(특히 저출산 대책)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부문 예산 또한 특정영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저출산 분야는 보육지원 사업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분야에 집중돼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5년 후의 재정 투자규모는 약 11.9조원이 증가(2015년 32.6조원에서 2020년에는 44.5조원 규모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 재원에 대하여 정부는 ① 국가재정운용계획·매년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기존 지출 구조조정, 과제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 마련, 세출 구조조정, 기존사업 지출 효율화 추진), ②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③ 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장기적 투자 필요성 및 재원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지속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표 4-1] 제3차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 15	' 16~' 20년 소요예산액					계
		' 16	' 17	' 18	' 19	' 20	
계	325,716	345,345	373,662	384,804	425,722	445,479	1,975,012
저출산 대책	192,932	204,633	217,224	218,438	220,011	223,837	1,084,143
고령화 대책	132,784	140,712	156,438	166,365	205,710	221,642	890,867

자료 :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92.

2. 특·광역시 간 비교 분석

1) 특·광역시별 자체사업 예산 총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전국 특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2014년도 자체사업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특광역시의 사업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광역시 중 전년대비 2014년도에 자체사업 예산이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시(54.7%), 대전시(29.1%), 인천시(27.2%), 부산시(22.4%) 등이며, 서울시는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의 마지막 해인 2015년에는 자체사업 예산의 증가폭은 둔화되거나 대부분 감소했는데, 광주시의 경우 전년대비 2015년에는 무려 500%나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는 자체사업 예산의 감소폭이 전년대비 6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첫 해인 2016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에 있어서 대부분의 특광역시가 증가한 반면, 인천시(-32.1%)와 세종시(-10.1%)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사업 예산의 증가폭에 있어서도 대전시는 무려 155.8%, 부산시는 112.4%, 서울시가 31.4%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두번째 해인 2017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에 있어서 서울(30.4%), 대구(50.2%), 대전(4.8%), 부산(3.7%), 울산(1.7%) 등은 증가했으나, 인천(-31.5%), 세종(-21.2%)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3~2015년) 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부산시(약 315,429백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인천시(약 -170,473백만원)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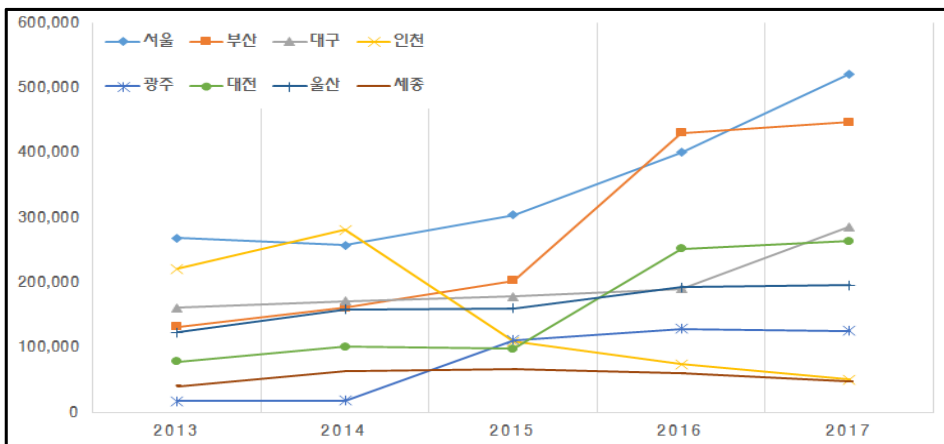
[표 4-2] 특광역시별 자체사업 예산 총계(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	예산	268,865	257,402	304,700	400,428	522,012
	증감률 ¹⁾²⁾	-	-4.3	18.4	31.4	30.4
부산	예산	131,736	161,206	203,000	431,128	447,165
	증감률	-	22.4	25.9	112.4	3.7
대구	예산	161,144	171,670	178,800	190,787	286,488
	증감률	-	6.5	4.2	6.7	50.2
인천	예산	221,204	281,343	109,000	74,060	50,731
	증감률	-	27.2	-61.3	-32.1	-31.5
광주	예산	17,840	18,635	111,900	129,340	125,734
	증감률	-	4.5	500.5	15.6	-2.8
대전	예산	78,385	101,170	98,462	251,856	263,838
	증감률	-	29.1	-2.7	155.8	4.8
울산	예산	123,261	158,725	160,200	193,060	196,343
	증감률	-	28.8	0.9	20.5	1.7
세종	예산	40,800	63,100	66,600	59,906	47,208
	증감률	-	54.7	5.5	-10.1	-21.2

주1)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증감률 = (금년 예산 - 작년예산) ÷ 작년예산 × 100



2) 특·광역시별 저출산 분야(대책) 자체사업 예산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전국 특광역시 저출산 대책에 대한 2014년도 자체사업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서울시(-1.3%)와 대전시(-0.1%)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특광역시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광역시 중 전년대비 2014년도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이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시(59.1%), 인천시(31.3%), 부산시(22.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의 마지막 해인 2015년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은 광주시(541.9%), 서울시(27.3%), 부산시(26.1%), 세종시(4.7%) 등은 증가했으나, 인천시의 경우는 무려 76.9%가 감소했고, 대전시도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첫 해인 2016년에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은 부산시(100%), 울산시(27.0%), 대전시(23.5%)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주시(-42.3%), 인천시(-20.7%), 세종시(-12.3%)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2016년도 자체사업 예산의 증가폭에 있어서 부산시는 전년 대비 무려 1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두번째 해인 2017년에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에 있어서 대전시(282.5%), 대구시(85.8%), 광주시(23.5%), 서울시(10.1%)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전시는 특광역시 중에서 전년 대비 2017년도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자체 예산액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천시(-47.5%)와 세종시(-22.5%)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3~2015년) 간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부산시(약 218,268백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인천시(약 -165,995백만원)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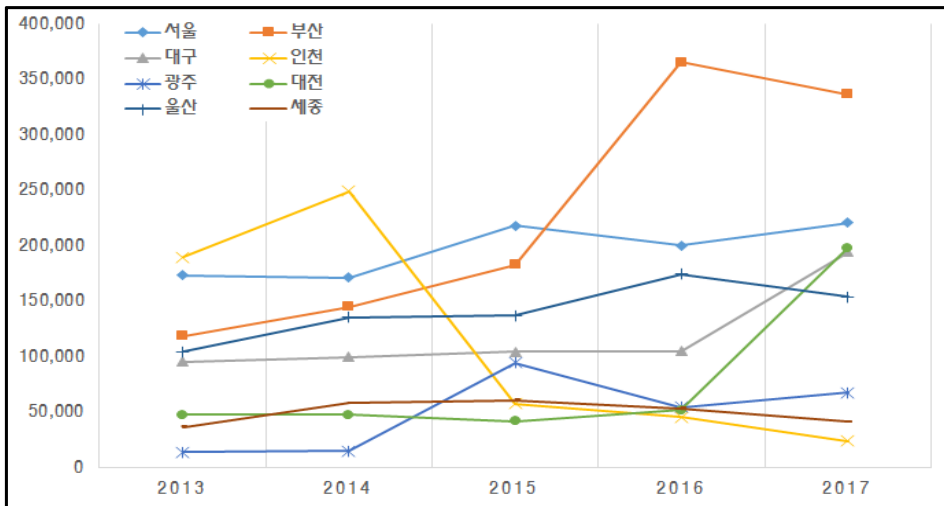
[표 4-3] 특광역시별 저출산 분야(대책)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	예산	173,544	171,303	218,000	200,504	220,733
	증감률 ¹⁾²⁾	-	-1.3	27.3	-8.0	10.1
부산	예산	118,448	145,007	182,800	365,519	336,716
	증감률	-	22.4	26.1	100.0	-7.9
대구	예산	95,565	99,662	104,200	104,721	194,582
	증감률	-	4.3	4.6	0.5	85.8
인천	예산	189,944	249,334	57,500	45,626	23,949
	증감률	-	31.3	-76.9	-20.7	-47.5
광주	예산	13,780	14,722	94,500	54,559	67,395
	증감률	-	6.8	541.9	-42.3	23.5
대전	예산	47,647	47,583	41,900	51,738	197,908
	증감률	-	-0.1	-11.9	23.5	282.5
울산	예산	104,413	135,698	137,300	174,405	153,773
	증감률	-	30.0	1.2	27.0	-11.8
세종	예산	36,400	57,900	60,600	53,120	41,329
	증감률	-	59.1	4.7	-12.3	-22.2

주1)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증감률 = (금년 예산 - 작년예산) ÷ 작년예산 × 100



3) 특·광역시별 고령화 분야(대책) 자체사업 예산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전국 특·광역시 고령화 대책에 대한 2014년도 자체사업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세종시(19.0%), 울산시(17.8%), 대구시(9.1%), 부산시(6.6%), 대전시(4.4%), 인천시(3.5%)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세종시는 전년 대비 19%가 증가하여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9.7%)와 광주시(-1.5%) 등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의 마지막 해인 2015년에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은 소폭 감소한 울산시(-0.5%)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광역시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는 전년 대비 무려 479.8%나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첫 해인 2016년에는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은 광주시(364%), 부산시(315%), 서울시(131.6%), 세종시(21.1%), 대구시(19%)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광주시는 전년도와 같이 아주 큰 폭(364%)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자치단체는 감소했는데, 그 감소의 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두번째 해인 2017년에는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에 있어서 울산시(127.8%), 부산시(79.3%), 서울시(50.7%), 대전시(25.0%)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시의 경우 전년에 비해서 127.8%나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광주시(-22.6%)와 세종시(-13.4%)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3~2015년) 간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서울시(약 205,999백만원)와 부산시(약 91,904백만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나머지는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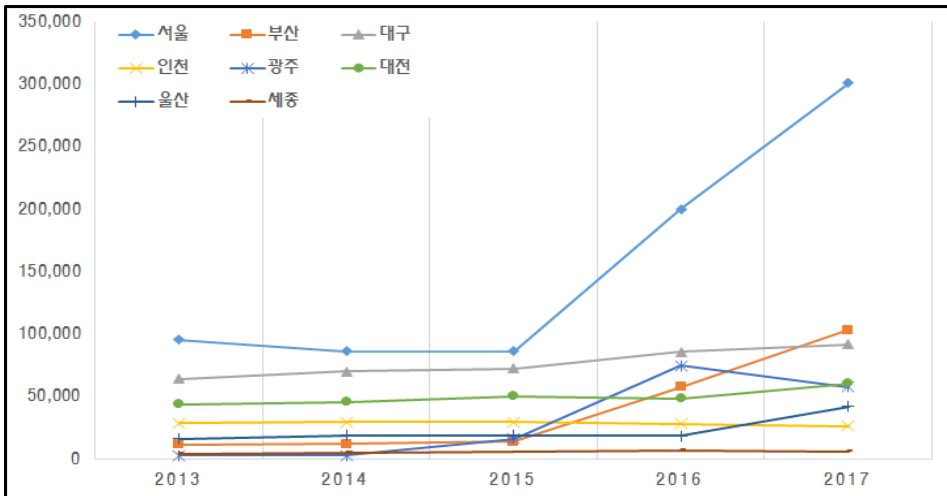
[표 4-4] 특광역시별 고령화 분야(대책)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	예산	95,280	86,059	86,300	199,911	301,279
	증감률 ¹⁾²⁾	-	-9.7	0.3	131.6	50.7
부산	예산	11,534	12,296	13,900	57,688	103,438
	증감률	-	6.6	13.0	315.0	79.3
대구	예산	64,275	70,147	72,300	86,052	91,604
	증감률	-	9.1	3.1	19.0	6.5
인천	예산	28,783	29,782	29,800	28,402	26,574
	증감률	-	3.5	0.1	-4.7	-6.4
광주	예산	2,818	2,777	16,100	74,704	57,857
	증감률	-	-1.5	479.8	364.0	-22.6
대전	예산	43,882	45,823	50,500	48,355	60,459
	증감률	-	4.4	10.2	-4.2	25.0
울산	예산	16,050	18,901	18,800	18,455	42,049
	증감률	-	17.8	-0.5	-1.8	127.8
세종	예산	4,200	5,000	5,600	6,783	5,876
	증감률	-	19.0	12.0	21.1	-13.4

주1)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증감률 = (금년 예산 - 작년예산) ÷ 작년예산 × 100



4) 특·광역시별 성장동력 분야(대응기반 강화) 자체사업 예산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전국 특광역시 성장동력 분야(대응기반 강화)에 대한 2014년도 자체사업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부산시(122.5%), 울산시(47.5%), 대구시(42.7%) 등은 성장동력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광역시 중 2014년도에 성장동력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한 곳은 부산광역시로 전년에 비해서 12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의 마지막 해인 2015년에 성장동력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에서 서울시(900%), 세종시(100%), 부산시(61.4%), 대구시(23.6%) 등은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서울의 경우, 무려 9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첫 해인 2016년에는 성장동력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은 대전시(113.3%)와 부산시(25.7%) 등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특·광역시에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 세종시 모두 90%이상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두번째 해인 2017년에는 성장동력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에 있어서 대구시(2,223.1%), 인천시(578.1%), 울산시(148.1%) 등은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으며, 특히 대구시의 경우는 2,223%나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최근 5년(2013~2015년) 간 성장동력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부산시(약 5,257백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나머지 특·광역시는 5년 전에 비해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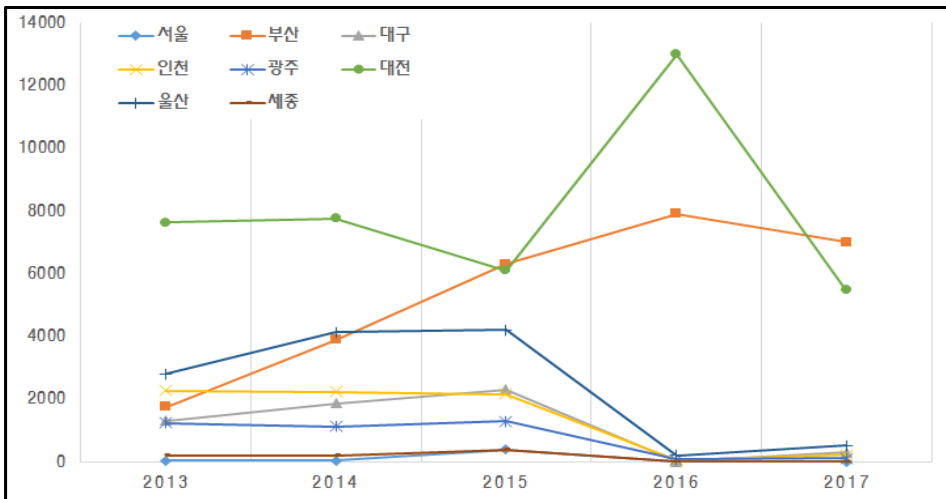
[표 4-5] 특광역시별 성장동력 분야(대응기반강화)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	예산	41	40	400	13	-
	증감률 ¹⁾²⁾	-	-2.4	900.0	-96.8	-
부산	예산	1,754	3,903	6,300	7,920	7,011
	증감률	-	122.5	61.4	25.7	-11.5
대구	예산	1,304	1,861	2,300	13	302
	증감률	-	42.7	23.6	-99.4	23.2
인천	예산	2,277	2,227	2,170	32	217
	증감률	-	-2.2	-2.6	-98.5	578.1
광주	예산	1,241	1,136	1,300	77	122
	증감률	-	-8.5	14.4	-94.1	58.4
대전	예산	7,632	7,764	6,100	13,010	5,471
	증감률	-	1.7	-21.4	113.3	-57.9
울산	예산	2,798	4,126	4,200	210	521
	증감률	-	47.5	1.8	-95.0	148.1
세종	예산	200	200	400	3	3
	증감률	-	0.0	100.0	-99.3	0.0

주1)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증감률 = (금년 예산 - 작년예산) ÷ 작년예산 × 100



2절 대전광역시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석

1.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현황

1)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역 현황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지역현황은 총인구(명), 인구증가율, 출생아수(합계출산율), 유소년인구(비율), 노인인구(비율), 인구부양비, 인구순이동(전입-전출)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전광역시의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인구에 있어서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2013년에 1,532,811명이었던 것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6년 말 현재 1,514,370명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인구증가율은 2014년부터 (-)로 접어든 이후 2016년 말 현재는 -0.0029인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출생아 수는 2013년 14,099명 이었던 것이 4년이 지난 2016년에는 12,436명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3년 1.234명에서 2015년에 1.277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1.192명으로 떨어졌다.

넷째, 유소년인구수는 2013년 243,653명에서 2017년 6월 현재 213,03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인구의 비율 또한 21.4%에서 19.1%로 감소하였다.

다섯째, 대전광역시의 노인인구는 2013년 150,651명(9.8%)이었던 것이, 2015년 10%대를 초과한 이후 2017년 6월 현재 176,847명(15.8%)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인구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인이 2013년 34.63명을 부양해야 했지만, 2016년 말 현재는 34.59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대전광역시의 인구 유출입은 2013년에 311명이 유입되었지만, 2014년에 유출초과현상이 나타난 이래 꾸준히 늘어나, 2016년 말 현재는 10,631명의 인구유출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유출 현상은 2015년의 경우 20,816명까지 이르렀다.

[표 4-6]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역 현황(2013~2017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¹⁾
총인구(명) ¹⁾	1,532,811	1,531,809	1,518,775	1,514,370	1,508,137
인구증가율	0.0054	-0.0007	-0.0085	-0.0029	-0.4116
출생아수(명) (합계출산율)	14,099 (1.234)	13,962 (1.250)	13,774 (1.277)	12,436 (1.192)	-
유소년인구(명) (비율)	243,653 (21.4)	236,053 (20.8)	224,747 (19.9)	217,638 (19.3)	213,039 (19.1)
노인인구(명) (비율)	150,651 (9.8)	158,329 (10.3)	165,528 (10.9)	171,568 (11.3)	176,847 (15.8)
인구부양비 ³⁾	34.63	34.67	34.58	34.59	34.87
인구순이동 (전입-전출)	311	-8,838	-20,616	-10,631	-8,320

주1) 2017년 6월 기준

주2) 주민등록인구 기준

주3) 인구부양비: 생산 연령 인구인 청·장년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 인구인 유·소년 인구(0~14세)와 노년 인구(65세 이상의 노년 인구)의 비율을 인구 부양비라고 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jsp>”. 검색일: 2017. 11. 02.

2)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사업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크게 ① 저출산 대책, ② 고령화 대책, ③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저출산 대책의 경우, 제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2011~2015년) 기간에 해당하는 2013~2015년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의 주요 사업은 일·가정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2013년), 출산장려지원금, 양육지원금 지급, 꿈나무 사랑카드, 맞선프로젝트(2014년),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015년) 등이다. 또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2016~2020년) 기간인 2016~2017년 사이의 저출산 대책 주요 사업은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지원금·허니문베이비 축복 나눔·임산부 산후우울증 예방 및 모유수유 교실운영(2016년),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및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급·한방난임치료비 지원·임산부 산후우울증 예방 및 모유수유 교실운영(2017년) 등이다.

둘째, 제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2011~2015년) 기간에 해당하는 2013~2015년 사이의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의 주요 사업은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강화, 건강증진과 의료보호 확대, 인프라 확충과 여가문화 활성화, 효문화 확산 여건 마련(2013년), 효문화지원센터 운영·효행자 표창·장수축하금 지급(2014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강화·건강증진과 의료보호 확대·인프라 확충과 여가문화 활성화·효문화 확산 여건 마련(2015년) 등이다. 또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2016~2020년) 기간인 2016~2017년 사이의 저출산 대책 주요 사업은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효문화지원센터 운영(2016년), 시니어클럽, 인복지관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노인건강지원을 위한 진료, 진단, 치료(요양)지원 강화, 효문화지원센터 운영(2017년) 등이다.

셋째, 제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2011~2015년) 기간에 해당하는 2013~2015년 사이의 대전광역시 성장동력을 위한 주요 사업은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개선(2013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경로당 리모델링, 운동치료실 설치, 노인지도자 대학운영, 노인행사 지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지원(2014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강화, 건강증진과 의료보호 확대, 인프라 확충과 여가문화 활성화, 효문화 확산 여건 마련(2015년) 등이다. 또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가회기본계획(2016~2020년) 기간인 2016~2017년 사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미혼남녀 맞선프로젝트 운영, 서람이 자치대학 운영(2016년), 미혼남녀 맞선프로젝트 운영, 다자녀가정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출산장려시책 홍보 및 인구교육, 언론캠페인(2017년) 등이다.

[표 4-7]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사업(2013~2017년)

구분		주요 사업내용
2013년	저출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수범도시 육성 : 111개 과제(공통 50, 자체 61) - 일·가정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고령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된 생활,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후 : 69개 과제(공통 23, 자체 46) -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강화, 건강증진과 의료보호 확대, 인프라 확충과 여가문화 활성화, 효문화 확산 여건 마련
	성장동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 24개 과제(공통 11, 자체 13)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2014년	저출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출산장려지원금, 양육지원금 지급, 꿈나무 사랑카드, 맞선프로젝트
	고령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문화 확산 여건 마련 - 효문화지원센터 운영, 효행자 표창, 장수축하금 지급
	성장동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확충과 여가문화 활성화 - 노인복지회관 건립, 경로당 리모델링, 운동치료실 설치, 노인지도자 대학운영, 노인행사 지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지원
2015년	저출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수범도시 육성 : 141개 과제(공통 54, 자체 87)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고령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된 생활,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후 : 72개 과제(공통 22, 자체 50) -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강화, 건강증진과 의료보호 확대, 인프라 확충과 여가문화 활성화, 효문화 확산 여건 마련
	성장동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 24개 과제(공통 10, 자체 14)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2016년	저출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지원금 ○ 허니문베이비 축복 나눔 ○ 임신부 산후우울증 예방 및 모유수유 교실운영
	고령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 ○ 효문화지원센터 운영
	대응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남녀 맞선프로젝트 운영 ○ 서랍이 자치대학 운영
2017년	저출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및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급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 임신부 산후우울증 예방 및 모유수유 교실운영
	고령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노인건강지원을 위한 진료, 진단, 치료(요양)지원 강화 ○ 효문화지원센터 운영
	대응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남녀 맞선프로젝트 운영 ○ 다자녀가정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 출산장려시책 홍보 및 인구교육, 언론캠페인 등

2.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사업예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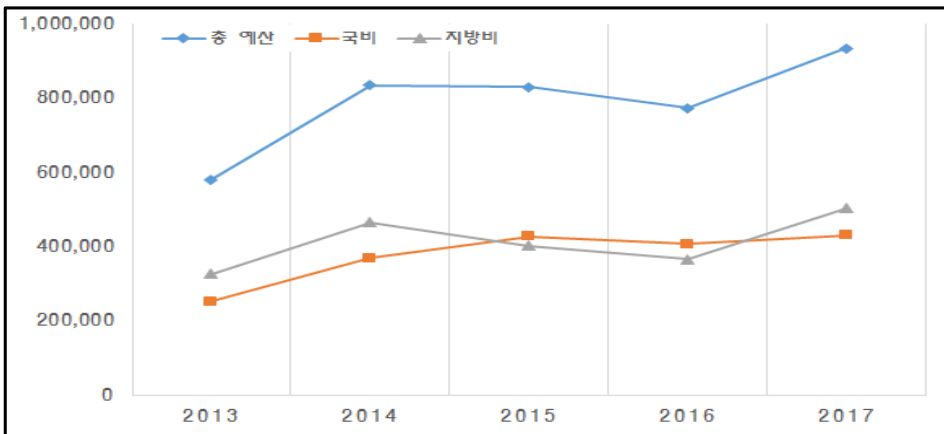
1) 총 사업예산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총사업예산은 2103년에 581,432 백만원(국비 43.6%:지방비 56.4%)이었던 것이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935,221 백만원(국비 46.1%:지방비 53.9%)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총사업비의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지방비(2013년 56.4%, 2014년 55.8%, 2017년 53.9%) 비율이 높으나, 2015년(48.5%)과 2016년(47.3%)의 경우는 국비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총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581,432 (100.0)	835,485 (100.0)	831,272 (100.0)	774,605 (100.0)	935,221 (100.0)
국비 (%)	253,697 (43.6)	369,375 (44.2)	427,914 (51.5)	408,077 (52.7)	431,073 (46.1)
지방비 (%)	327,853 (56.4)	466,110 (55.8)	403,357 (48.5)	366,528 (47.3)	504,148 (53.9)



2) 공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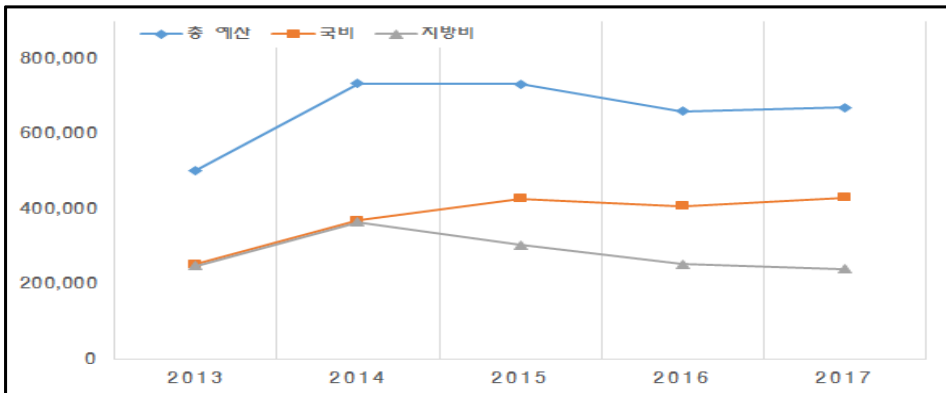
(1) 공통사업계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공통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3년에 503,047백만원(국비 50.4%:지방비 49.6%)이었던 것이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617,383백만원(국비 64.2%:지방비 35.8%)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공통사업 예산의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은 대체적으로 국비(2013년 50.4% → 2014년 50.3% → 2015년 58.4% → 2016년 61.7% → 2017년 64.2%) 비율이 높았었는데, 제3차 기본계획이 시작하는 2016년 부터는 그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공통사업 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503,047 (100.0)	734,316 (100.0)	732,810 (100.0)	661,503 (100.0)	671,383 (100.0)
국비 (%)	253,697 (50.4)	369,375 (50.3)	427,914 (58.4)	408,077 (61.7)	431,073 (64.2)
지방비 (%)	249,468 (49.6)	364,941 (49.7)	304,895 (41.6)	253,426 (38.3)	240,309 (35.8)



(2) 저출산 분야(대책)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의 공통사업을 위한 전체 예산은 2013년에 348,622백만원(69.3%), 2014년에 510,880백만원(69.6%), 2015년에 438,759백만원(59.9%), 2016년에 362,331백만원(54.8%), 2017년에 366,855백만원(54.6%) 등의 규모이며, 이는 3개의 공통사업 예산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공통사업은 50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만5세이하 보육·교육 공통과정 도입,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돌봄서비스 확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86.3%를 배정하고 있으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사업 예산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예산 중에 43.8%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공통사업은 55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누리과정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돌봄서비스(인건비) 확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86.2%를 배정하고 있으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사업을 위한 예산이 저출산 대책 사업 전체 예산중에 44.6%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공통사업은 54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누리과정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돌봄서비스(인건비) 확대,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86.2%를 배정하고 있으며,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사업에 저출산 대책 사업 전체 예산중에 43.7%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공통사업은 55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누리과정 확대,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돌봄서비스(인건비) 확대,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87.1%를 배정하고 있으며,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사업을 위한 예산이 저출산 대책 사업 전체 예산중에 42.8%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공통사업은 50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돌봄서비스(인건비) 확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86.7%를 배정하고 있으며,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사업을 위한 예산이 저출산 대책 사업 전체 예산중에 5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0]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공동사업 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주요사업내용	사업예산규모			
		계(%)	국비	지방비	
2013년	소계	저출산분야(50개 과제)	348,622(69.3)¹⁾	154,386	194,236
	주요사업 (5개)	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152,616(43.8) ²⁾	91,534	61,082
		② 만 5세이하 보육·교육 공통과정 도입	74,773(21.4)	-	74,773
		③ 양육수당 지원 확대	41,442(11.9)	24,865	16,557
		④ 보육돌봄서비스 확대	20,752(6.0)	12,292	8,461
		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11,432(3.3)	5,716	5,716
	주요사업(5개) 합계	301,015(86.3)	134,407	166,589	
2014년	소계	저출산분야(55개 과제)	510,880(69.6)	221,470	289,409
	주요사업 (5개)	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227,909(44.6)	127,998	99,911
		② 누리과정 확대	116,916(22.9)	-	116,916
		③ 양육수당 지원 확대	58,648(11.5)	41,054	17,594
		④ 보육돌봄서비스(인건비) 확대	21,049(4.1)	12,460	8,589
		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16,049(3.1)	8,024	8,024
	주요사업(5개) 합계	440,571(86.2)	189,536	251,034	
2015년	소계	저출산분야(54개 과제)	438,759(59.9)	229,640	209,110
	주요사업 (5개)	①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191,892(43.7)	143,919	47,973
		② 누리과정 확대	101,559(23.1)	-	101,559
		③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52,014(11.9)	39,010	13,004
		④ 보육돌봄서비스(인건비) 확대	19,770(4.5)	11,862	7,908
		⑤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지원	12,875(2.9)	6,437	6,437
	주요사업(5개) 합계	378,110(86.2)	201,228	176,881	
2016년	소계	저출산 대책(55개 과제)	362,331(54.8)	206,458	155,872
	주요사업 (5개)	①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155,246(42.8)	116,435	38,812
		② 누리과정 확대	64,210(17.7)	-	64,210
		③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56,296(15.5)	42,222	14,074
		④ 보육돌봄서비스(인건비) 확대	21,682(6)	13,009	8,673
		⑤ 국가 필수 예방 접종	18,006(5)	9,003	9,003
	주요사업(5개) 합계	315,440(87.1)	180,669	134,772	
2017년	소계	저출산 대책(50개 과제)	366,855(54.6)	216,496	150,359
	주요사업 (5개)	①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214,853(58.6)	119,902	94,951
		②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53,972(14.7)	40,479	13,493
		③ 보육돌봄서비스(인건비) 확대	20,322(5.5)	12,193	8,129
		④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16,768(4.6)	8,384	8,384
		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2,292(3.4)	7,375	4,917
	주요사업(5개) 합계	318,207(86.7)	188,333	129,874	

주: 1) 공통사업 예산에서 저출산분야(대책)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2) 당해 연도 저출산분야(대책) 총예산에서 세부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3) 고령화 분야(대책)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의 공통사업을 위한 전체 예산은 2013년에 147,649백만원(29.4%), 2014년에 217,865백만원(29.7%), 2015년에 288,384백만원(39.4%), 2016년에 302,269백만원(45.7%), 2017년에 304,493백만원(45.4%) 등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공통사업 중 고령화 대책 사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공통사업은 23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 호문화진흥원 건립,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90.8%를 배정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사업 예산이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예산 중에 68.4%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공통사업은 22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 호문화진흥원 건립,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93.4%를 배정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사업 예산이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예산 중에 74.8%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공통사업은 22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호문화진흥원 건립, 사회적 기업 육성)에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95.9%를 배정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사업 예산이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예산 중에 82.6%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공통사업은 28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호문화진흥원 건립, 사회적 기업 육성)에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95.8%를 배정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사업 예산이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예산 중에 81.3%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공통사업은 26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에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96.6%를 배정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사업 예산이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예산 중에 82.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1]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공동사업 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주요사업내용	사업예산규모		
			계(%)	국비	지방비
2013년	소계	고령화분야(23개 과제)	147,649(29.4)¹⁾	97,006	50,773
	주요사업 (5개)	①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100,999(68.4) ²⁾	70,699	30,299
		②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	15,013(10.2)	7,506	7,506
		③ 효 문화진흥원 건립	9,200(6.2)	4,600	4,600
		④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4,687(3.2)	3,266	1,421
		⑤ 사회적 기업 육성	4,197(2.8)	3,357	839
	주요사업(5개) 합계	134,096(90.8)	89,428	44,665	
2014년	소계	고령화분야(22개 과제)	217,865(29.7)	144,797	73,068
	주요사업 (5개)	①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162,864(74.8)	114,005	48,859
		②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	20,520(9.4)	10,260	10,260
		③ 효 문화진흥원 건립	8,032(3.7)	4,016	4,016
		④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6,771(3.1)	4,677	2,134
		⑤ 사회적 기업 육성	5,405(2.5)	4,218	1,187
	주요사업(5개) 합계	203,592(93.4)	137,176	66,456	
2015년	소계	고령화분야(22개 과제)	288,384(39.4)	195,045	93,338
	주요사업 (5개)	①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238,296(82.6)	166,807	71,488
		②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20,333(7.1)	10,166	10,166
		③ 독거노인 보호강화(노인돌봄서비스)	6,477(2.2)	4,534	1,943
		④ 효 문화진흥원 건립	5,990(2.1)	2,995	2,995
		⑤ 사회적 기업 육성	5,337(1.9)	3,980	1,057
	주요사업(5개) 합계	276,433(95.9)	188,482	87,649	
2016년	소계	고령화 대책(28개 과제)	302,269(45.7)	200,873	101,396
	주요사업 (5개)	①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245,664(81.3)	171,964	73,699
		②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27,212(9)	11,526	15,686
		③ 독거노인 보호강화(노인돌봄서비스)	7,739(2.6)	5,257	2,482
		④ 사회적 기업 육성	5,228(1.7)	3,801	1,427
		⑤ 효 문화진흥원 건립	3,652(1.2)	1,824	1,824
	주요사업(5개) 합계	289,495(95.8)	194,372	95,118	
2017년	소계	고령화 대책(26개 과제)	304,493(45.4)	214,553	89,940
	주요사업 (5개)	①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251,188(82.5)	187,492	63,696
		②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27,255(9)	11,526	15,733
		③ 독거노인 보호강화(노인돌봄서비스)	7,020(2.3)	4,785	2,235
		④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4,394(1.4)	2,197	2,197
		⑤ 사회적 기업 육성	4,304(1.4)	3,128	1,176
	주요사업(5개) 합계	294,161(96.6)	209,128	85,037	

주: 1) 공동사업 예산에서 고령화분야(대책)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2) 당해 연도 고령화분야(대책) 총예산에서 세부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4) 성장동력 분야(대응기반 강화)

대전광역시의 성장동력 분야의 공통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3년에 6,775백만원(1.3%), 2014년에 5,570백만원(0.8%), 2015년에 5,675백만원(0.8%), 2016년에 25백만원(0.004%), 2017년에 34백만원(0.005%) 등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공통사업 중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성장동력 분야의 공통사업은 11개 과제이며, 5개 주요 과제(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여건 개선,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에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86.2%를 배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사업이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예산 중에 38.5%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성장동력 분야의 공통사업은 11개 과제이며, 5개 주요 과제(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여건 개선,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에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78.9%를 배정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여건 개선 사업이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예산 중에 30.6%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성장동력 분야의 공통사업은 10개 과제이며, 5개 주요 과제(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여건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특성화 취업진로 지원 강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에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사업예산 91.3%를 배정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여건 개선 사업이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예산 중에 31.4%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성장동력 분야의 공통사업은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사업 1개 과제이며, 성장동력 분야에 공통사업 전체의 0.004%를 배정하고 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성장동력 분야의 공통사업은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사업 1개 과제이며, 성장동력 분야에 공통사업 전체 예산 중 0.005%를 배정하고 있다.

[표 4-12] 대전광역시 성장동력 분야 공통사업 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주요사업내용	사업예산규모			
		계(%)	국비	지방비	
2013년	소계	성장동력 분야(11개 과제)	6,775(1.3)¹⁾	2,304	4,458
	주요 사업 (5개)	①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2,610(38.5) ²⁾	-	2,610
		②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여건 개선	1,060(15.6)	645	415
		③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1,060(15.6)	742	318
		④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627(9.3)	-	627
		⑤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480(7.1)	240	240
		주요사업(5개) 합계	5,837(86.2)	1,627	4,210
2014년	소계	성장동력 분야(11과제)	5,570(0.8)	3,107	2,463
	주요 사업 (5개)	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여건 개선	1,705(30.6)	1,084	621
		②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990(17.8)	693	297
		③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944(16.9)	661	283
		④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274(4.9)	-	274
		⑤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480(8.6)	240	240
		주요사업(5개) 합계	4,393(78.9)	2,678	1,715
2015년	소계	성장동력 분야(10과제)	5,675(0.8)	3,228	2,446
	주요 사업 (5개)	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여건 개선	1,782(31.4)	1,247	535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22(25.1)	959	463
		③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855(15.1)	598	257
		④ 특성화 취업진로 지원 강화	698(12.3)	-	698
		⑤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	424(7.5)	354	70
		주요사업(5개) 합계	5,181(91.3)	3,158	2,023
2016년	소계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강화(1과제)	25(0.004)	17	7
	주요 사업 (1개)	①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25(100.0)	17	7
2017년	소계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강화(1과제)	34(0.005)	23	10
	주요 사업 (1개)	①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34(100.0)	23	10

주: 1) 공통사업 예산에서 성장동력분야(대응기반강화)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2) 당해 연도 성장동력분야(대응기반강화) 총예산에서 세부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3) 대전시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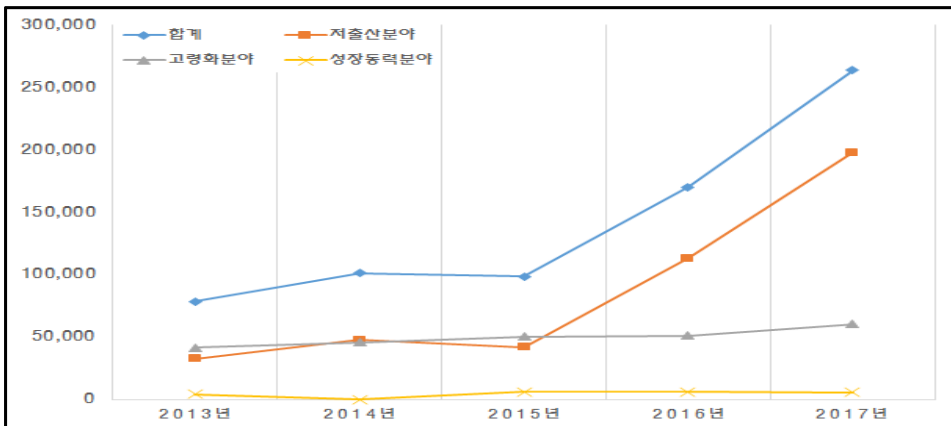
(1) 자체사업 예산 총계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총계는 2013년에 78,384백만원이고,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263,837백만원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에서 저출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 41.7%, 2014년에 47.0%, 2015년에 42.54%, 2016년에 66.4%, 2017년에 75.0%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에서 고령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 53.1%, 2014년에 45.3%, 2015년에 51.3%, 2016년에 30.1%, 2017년에 22.9%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에서 성장동력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 5.2%, 2014년에 7.7%, 2015년에 6.2%, 2016년에 3.5%, 2017년에 2.1%로 나타났다.

[표 4-13]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78,384	101,168	98,460	170,263	263,837
(%)	(100.0)	(100.0)	(100.0)	(100.0)	(100.0)
저출산분야	32,649	47,583	41,890	113,102	197,907
(%)	(41.7)	(47.0)	(42.5)	(66.4)	(75.0)
고령화분야	41,644	45,822	50,481	51,174	60,459
(%)	(53.1)	(45.3)	(51.3)	(30.1)	(22.9)
성장동력분야	4,091	77,63	6,089	5,987	5,471
(%)	(5.2)	(7.7)	(6.2)	(3.5)	(2.1)



(2) 자체사업 저출산 분야(대책)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의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3년에 32,649백만원(41.7%), 2014년에 47,583백만원(47.0%), 2015년에 41,890백만원(42.5%), 2016년에 113,102백만원(66.4%), 2017년에 197,907백만원(75.0%) 등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61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55.8%를 배정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사업 예산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14.7%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81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60%를 배정하고 있으며,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23.6%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87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57.6%를 배정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예산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17.8%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76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지원금)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63.8%를 배정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40.9%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92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누리과정 확대, 초등학교 종일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83.7%를 배정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확대 예산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62.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4] 대전광역시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주요사업내용	사업예산규모(%)	
2013년	소계	저출산분야 자체사업(61개 과제)	32,649(41.7)
	주요 사업 (5개)	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800(14.7)
		②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200(12.9)
		③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032(12.3)
		④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2,880(8.8)
		⑤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2,315(7.1)
		주요사업(5개) 합계	18,227(55.8)
2014년	소계	저출산분야 자체사업(81개 과제)	47,583(47.0)
	주요 사업 (5개)	①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11,235(23.6)
		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160(10.8)
		③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658(9.8)
		④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380(9.2)
		⑤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3,096(6.5)
		주요사업(5개) 합계	28,529(60.0)
2015년	소계	저출산분야 자체사업(87개 과제)	41,890(42.5)
	주요 사업 (5개)	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467(17.8)
		②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5,034(12.0)
		③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608(11.0)
		④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572(10.9)
		⑤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2,430(5.8)
		주요사업(5개) 합계	24,111(57.6)
2016년	소계	출산이 행복한 수법도시 육성(76개 과제)	113,102(66.4)
	주요 사업 (5개)	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46,295(40.9)
		②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10,039(8.9)
		③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7,488(6.6)
		④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608(4.1)
		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지원금	3,770(3.3)
		주요사업(5개) 합계	72,200(63.8)
2017년	소계	저출산 대책(92개 과제)	197,907(75.0)
	주요 사업 (5개)	① 누리과정 확대	124,430(62.9)
		② 초등학교 중일돌봄교실 운영	19,100(9.7)
		③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0,393(5.3)
		④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165(3.6)
		⑤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464(2.3)
		주요사업(5개) 합계	165,552(83.7)

주: 1) 자체사업 총예산에서 저출산분야(대책)의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2) 당해 연도 저출산분야(대책) 총예산에서 세부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3) 자체사업 고령화 분야(대책)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의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3년에 41,644백만원(53.1%), 2014년에 45,822백만원(45.3%), 2015년에 50,481백만원(51.3%), 2016년에 51,174백만원(30.1%), 2017년에 60,459백만원(22.9%) 등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자체사업은 46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경노식당 무료급식 지원, 꿈나무지킴이)에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65.7%를 배정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이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43.5%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자체사업은 50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꿈나무지킴이, 경노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66.7%를 배정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이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43.2%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자체사업은 50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시니어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 65세이상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68.2%를 배정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이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39.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자체사업은 51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저소득 노인장기요양 비용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꿈나무지킴이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78.3%를 배정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이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52.4%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자체사업은 51개 과제이며, 5개 주요과제(저소득 노인장기요양 비용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꿈나무지킴이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77.3%를 배정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이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51.1%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5] 대전광역시 고령화 대책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주요사업내용	사업예산규모(%)	
2013년	소계	고령화분야 자체사업(46개 과제)	41,644(53.1)¹⁾
	주요 사업 (5개)	①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8,106(43.5) ²⁾
		② 경로당 운영 지원	2,714(6.5)
		③ 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2,540(6.1)
		④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2,138(5.1)
		⑤ 꿈나무지킴이	1,882(4.5)
	주요사업(5개) 합계	27,380(65.7)	
2014년	소계	고령화분야 자체사업(50개 과제)	45,822(45.3)
	주요 사업 (5개)	①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9,797(43.2)
		② 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3,184(6.9)
		③ 경로당 운영 지원	2,741(6.0)
		④ 꿈나무지킴이	2,728(6.0)
		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2,136(4.7)
	주요사업(5개) 합계	30,586(66.7)	
2015년	소계	고령화분야 자체사업(50개 과제)	50,481(51.3)
	주요 사업 (5개)	①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9,797(39.2)
		② 경로당 운영 지원	6,155(12.2)
		③ 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3,192(6.3)
		④ 시니어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	2,684(5.3)
		⑤ 65세이상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607(5.2)
	주요사업(5개) 합계	34,435(68.2)	
2016년	소계	고령화 대책 자체사업(51개 과제)	51,174(30.1)
	주요 사업 (5개)	① 저소득 노인장기요양 비용지원	26,839(52.4)
		② 경로당 운영지원	4,771(9.3)
		③ 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3,482(6.8)
		④ 꿈나무지킴이 사업	2,743(5.4)
		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2,235(4.4)
	주요사업(5개) 합계	40,070(78.3)	
2017년	소계	고령화 대책 자체사업(51개 과제)	60,459(22.9)
	주요 사업 (5개)	① 저소득 노인장기요양 비용지원	30,923(51.1)
		② 경로당 운영 지원	6,738(11.1)
		③ 구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3,966(6.6)
		④ 꿈나무지킴이 사업	2,744(4.5)
		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2,349(3.9)
	주요사업(5개) 합계	46,720(77.3)	

주: 1) 자체사업 총예산에서 고령화분야(대책)의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2) 당해 연도 고령화분야(대책) 총예산에서 세부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4) 자체사업 성장동력 분야(대응기반 강화)

대전광역시 성장동력에 대한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3년에 4,091백만원(5.2%), 2014년에 7,763백만원(7.7%), 2015년에 6,089백만원(6.2%), 2016년에 5,987백만원(2.1%), 2017년에 5,471백만원(3.5%) 등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성장동력에 대한 자체사업은 13개 과제이며, 5개 주요 과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특성화고 학생 해외인턴십 파견, 꿈나무과학멘토, 평생교육대학 운영, 외국인 주민생활안내 책자발간)에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96.5%를 배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사업 예산이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76.4%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성장동력에 대한 자체사업은 17개 과제이며, 5개 주요 과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특성화고 학생 해외인턴십 파견, 꿈나무과학멘토,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평생교육대학 운영)에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97.9%를 배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사업 예산이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91.2%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성장동력에 대한 자체사업은 14개 과제이며, 5개 주요 과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꿈나무과학멘토, 평생교육대학 운영,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외국인 주민생활안내 책자발간)에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98.2%를 배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사업 예산이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89.3%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성장동력에 대한 자체사업은 16개 과제이며, 5개 주요 과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힐링아트 페스티벌, 꿈나무과학멘토,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 언론캠페인 등 홍보)에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97.2%를 배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사업 예산이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83.4%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성장동력에 대한 자체사업은 16개 과제이며, 5개 주요 과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힐링아트 페스티벌, 꿈나무과학멘토,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 언론캠페인 등 홍보)에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자체사업예산 96.6%를 배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사업 예산이 성장동력을 위한 전체 자체예산 중에 7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6] 대전광역시 성장동력 분야 자체사업 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사업내용	사업예산규모(%)	
2013년	소계	성장동력분야 자체사업(13개 과제) 4,091(5.2)^D	
	주요사업(5개)	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3,125(76.4) ²⁾
		② 특성화고 학생 해외인턴십 파견	600(14.7)
		③ 꿈나무과학멘토	110(2.7)
		④ 평생교육대학 운영	64(1.6)
		⑤ 외국인 주민생활안내 책자발간	50(1.2)
	주요사업(5개) 합계	3,949(96.5)	
2014년	소계	성장동력분야 자체사업(17개 과제) 7,763(7.7)	
	주요사업(5개)	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7,082(91.2)
		② 특성화고 학생 해외인턴십 파견	200(2.6)
		③ 꿈나무과학멘토	120(1.5)
		④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114(1.5)
		⑤ 평생교육대학 운영	81(1.0)
	주요사업(5개) 합계	7,597(97.9)	
2015년	소계	성장동력분야 자체사업(14개 과제) 6,089(6.2)	
	주요사업(5개)	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440(89.3)
		② 꿈나무과학멘토	231(3.8)
		③ 평생교육대학 운영	158(2.6)
		④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100(1.6)
		⑤ 외국인 주민생활안내 책자발간	50(0.8)
	주요사업(5개) 합계	5,979(98.2)	
2016년	소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 자체사업(16개 과제) 5,987(2.1)	
	주요사업(5개)	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4,992(83.4)
		② 힐링아트 페스티벌	397(6.6)
		③ 꿈나무과학멘토	261(4.4)
		④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111(1.9)
		⑤ 출산장려 언론캠페인 등 홍보	57(1.0)
	주요사업(5개) 합계	5,818(97.2)	
2017년	소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 자체사업(16개 과제) 5,471(3.5)	
	주요사업(5개)	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4,258(77.8)
		② 힐링아트 페스티벌	531(9.7)
		③ 꿈나무과학멘토	311(5.7)
		④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131(2.4)
		⑤ 출산장려 언론캠페인 등 홍보	56(1.0)
	주요사업(5개) 합계	5,287(96.6)	

주: 1) 자체사업 총예산에서 성장동력분야(대응기반강화)의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2) 당해 연도 성장동력분야(대응기반강화) 총예산에서 세부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3절 분석결과와 시사점

1. 특광역시의 시사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8개 특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사업예산(5년간)을 분석한 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5년(2013년~2017년) 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의 총 규모에 있어서 부산시(약 315,429백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인천시(약 -170,473백만원)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추진 사업 첫째인 2016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2016년 자체사업 총예산 중에서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고령화 대책 자체사업 예산(17.0%)과 대응기반강화 자체사업 예산(5.2%)이 증가되었다.

둘째, 최근 5년(2013년~2017년) 간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부산시(약 218,268백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인천시(약 -165,995백만원)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는 2016년에 전년에 비해 100% 증가했는데, 우리아이 보육맘 지원, 진로탐색 기반모바일 웹/앱 개발, 정부3.0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 등의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반면, 인천시는 2015년에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비중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다.

셋째, 최근 5년(2013년~2017년) 간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서울시(약 205,999백만원)와 부산시(약 91,904백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나머지는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서울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의 추진 사업 첫해인 2016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2%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100%), 경로당 활성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66.6%), 고령친화 동네 옥상녹화 조성(22.3%) 등의 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다.

넷째, 최근 5년(2013년~2017년) 간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부산시(약 5,257백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나머지 특광역시들은 5년 전에 비해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의 추진 사업 첫해인 2016년에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3%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다자녀 교원 전보시 인사가산점부여·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24.7%), 5월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44.8%) 등의 사업에이 크게 증가하였다.

2. 대전광역시의 시사점

1)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공통사업예산의 시사점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공통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3년에 503,047백만원(국비 50.4%:지방비 49.6%)이었던 것이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617,383백만원(국비 64.2%:지방비 35.8%)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대전광역시의 공통사업 예산규모는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첫 해인 2016년에 전년도에 비해 국비 및 지방비 모두 감축되었는데, 이는 고령화 대책 분야는 증가(2.5%)했으나, 저출산 대책에서 -20.2%, 대응기반강화 분야에서 -12.9%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의 규모는 공통사업 총예산에서 54.6%(2017년)~69.9%(2014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비를 포함

한 5대 주요사업이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87%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고령화 대책 사업예산의 규모는 공통사업 총예산에서 29.4%(2013년)~45.7%(2016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내실화를 포함한 5대 주요사업이 고령화 대책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부분 사업예산의 규모는 공통사업 총예산에서 극히 미미한 정도이며, 과제수에 있어서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자체사업예산의 시사점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총계는 2103년에 78,384백만원이고,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263,837백만원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체사업예산 총계의 증가폭은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2016년에 98,460백만원에서 170,263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사업의 예산 규모는 자체사업 총예산에서 41.7%(2013년)~75.0%(2017년) 정도였으며, 2017년에 급격히 늘어났다. 저출산 대책 사업의 세부 사업 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5대 주요사업이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절반 이상이었으며, 2017년에는 무려 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의 예산 규모는 자체사업 총예산에서 22.9%(2017년)~53.1%(2013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사업을 포함한 5대 주요사업이 고령화 대책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65.7%(2013년)~78.3%(2016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부분 사업의 예산 규모는 자체사업 총예산에서 2.1%(2016년)~7.7%(2014년) 정도로 매우 적으며, 사업의 수 또한 매우 적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 5대 주요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1절 단기적 추진 과제

2절 중장기적 추진 과제

5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1절 단기적 추진 과제

1. 사업주체별 재정분담의 명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17개 시도(교육청, 시·군·구)가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은 사업주체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행계획상의 세부사업별 예산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공통사업의 경우는 분야별(저출산, 고령화 분야) 서울시교육청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따로 분리하여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⁵⁾ 지자체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시행계획상의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주체와 예산규모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별로 본청, 교육청으로, 자체사업의 경우는 본청, 자치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진하고자하는 세부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대전시의 시행계획상의 세부사업 중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본청), 누리과정지원(교육청), 동구 아카데미 운영(동구), 대덕구 노인의 날 행사 지원(대덕구) 등 사업주체별로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예컨대, 서울시 시행계획에서 누리과정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초·중·고등학교 돌봄 교실 확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은 서울시교육청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작성한 것은 좋은 예이다.

2.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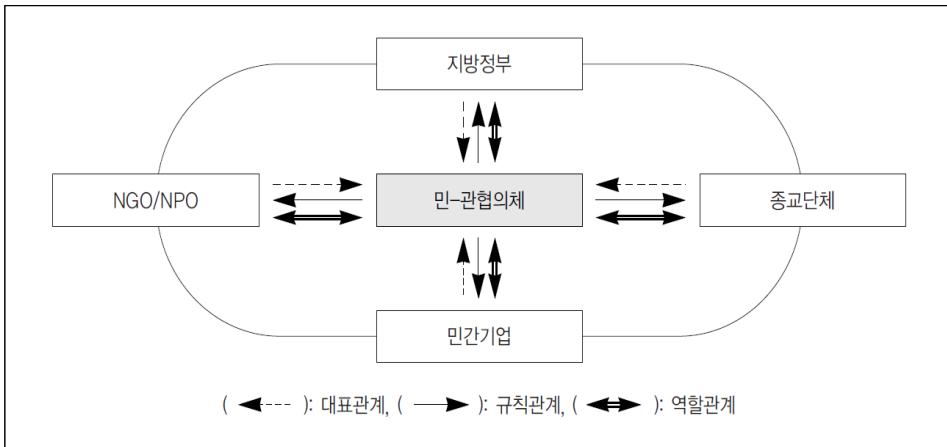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② 홍보·인식 개선 활성화, ③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⁶⁾ 등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지역-정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시행계획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1개 공통과제(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에 34백만원, 16개 자체과제에 54억(이중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약 43억)의 예산규모로는 대응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거버넌스체계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주체를 몇 개(여기서는 정부 영역, 민간기업 영역, 시민사회단체 영역, 종교단체 영역)의 영역으로 범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길수·한형서, 2011: 208).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각의 행위주체(단체)들은 거버넌스체계에 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또는 대표자를 협의체에 참여시킨다. 거버넌스체계는 각 참여단체 및 대표자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해놓은 각종의 규칙들을 제안한다.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상호의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 물자,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각 행위주체의 활동영역에 따라 당해 거버넌스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기반 강화

6) 세부적인 사업은 ①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중앙정부 등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강화,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③ 근거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이다.

를 위한 공통과제로서 지역거버넌스 구축에 투자되는 재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자체사업의 경우도 몇몇 사업에 예산 배정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예산 또한 증액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대응의 정책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 최종 확정단계 이전에 민-관협의체(거버넌스)를 통한 심의 또는 회람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출처 : 최길수·한형서(2011 : 208).

3. 사업집행에 대한 점검체계 강화

정부는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5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적극 투자한 결과 기혼여성의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는 등 더 이상 합계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고 1.2대로 회복되었으나, 세계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과 더불어 만혼 심화 등으로 합계출산율은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현상은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여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 높은 노인자살율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6: 18-19).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고, 같은 기간 동안 약 1,975,012억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대전광역시도 지난 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공동사업 지방비 부담의 경우 매년 240,309(2017년)에서 364,941백만원(2014년) 규모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에 투자되는 재원만도 78,384백만원(2013년)에서 263,837백만원(2017년) 규모로 해가 거듭될수록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 또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제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자되는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즉, 정부(지방정부 포함)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집행 모니터링, 사후 평가 및 환류과정을 통해 투입비용 및 성과를 측정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대전광역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의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에 매년 2,000억원대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부문별(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주요 5대 사업에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다(<표 5-1>참조).

[표 5-1]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부문별 주요 사업예산(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 분	주요사업내용	사업예산규모(%)
저출산 분야	2013년	주요사업(5개) 합계	18,227(55.8)
	2014년	주요사업(5개) 합계	28,529(60.0)
	2015년	주요사업(5개) 합계	24,111(57.6)
	2016년	주요사업(5개) 합계	72,200(63.8)
	2017년	주요사업(5개) 합계	165,552(83.7)
고령화 분야	2013년	주요사업(5개) 합계	27,380(65.7)
	2014년	주요사업(5개) 합계	30,586(66.7)
	2015년	주요사업(5개) 합계	34,435(68.2)
	2016년	주요사업(5개) 합계	40,070(78.3)
	2017년	주요사업(5개) 합계	46,720(77.3)
성장동력 분야	2013년	주요사업(5개) 합계	3,949(96.5)
	2014년	주요사업(5개) 합계	7,597(97.9)
	2015년	주요사업(5개) 합계	5,979(98.2)
	2016년	주요사업(5개) 합계	5,818(97.2)
	2017년	주요사업(5개) 합계	5,287(96.6)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가 매년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부분의 사업예산에 “사업집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업예산의 성과관리체계 확립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말 차년도 시행계획 지자체 수립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가중치) 및 성과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⁷⁾

[표 5-2]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행계획 성과지표 작성(예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비고
		구분	16	17	18	19			
1.사업참여 자 취업률(%) (0.5)	정량/ 결과	목표					$(\text{취업연구원수}/\text{참여연구원전체}) \times 100$	과제최종 보고서	최종성과 =(지표① *0.5)+(지 표②*0.5)
		실적							
2.사업참여 자 만족도(점) (0.5)	정성/ 과정	목표					사업참여 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꺠렵)	
		실적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들은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각 사업들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는 정책사업을 성과관리의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성과계획서-

7) 구체적으로, ①성과지표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높고 사업내용을 대표하는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2개 이상의 지표가 있을 경우 각 성과지표별로 0.0~1.0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 ②성격부분에 성과지표가 정성/정량, 과정/결과 지표인지를 표기, ③신규 사업은 합리적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17년 목표치를 제시,' 16년 실적에는 '신규'로 표기, ④측정산식은 계산식, 비교근거, 만족도 조사의 척도 등을 제시하고, 측정방법에는 만족도조사, 통계확인, 성취도 확인 등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⑤자료수집방법/출처에는 지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방법/출처 기재하고 객관적인 성과자료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이유를 기재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4).

성과예산서-성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와 사업예산의 정책사업을 확실히 연계하여 편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임성일·이효, 2016:123, 재인용). 이러한 성과기준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성과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여야 하고, 둘째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중요하며, 셋째로 예산(투입재원)과 성과(예산집행의 결과)를 연계하여야 하며, 넷째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기관들은 공공서비스의 산출결과에 기초하여 책임을 지며 예산수립과 성과보고는 투입이 아니라 산출결과를 강조함)하여야 한다(이효, 2015: 23).

2절 중장기적 추진 과제

1. 저출산 대책 분야

1) 저출산 정책의 목표 명확화

저출산 대책은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의 출산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목표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목표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때 저출산 대응정책은 아동·교육·여성·고용정책과 예산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문에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주체로서 지역사회 전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2)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가족 친화 경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⁸⁾'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족진흥원의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은 주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가족친화인증 신청시과 함께 지역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출산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업의 자녀돌봄 시간지원은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출산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저출산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현장에서 남녀에게 차등적용하지 않고 활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책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 측면에서 자녀출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성과관리를 지향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예산제도의 운영을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평가체계의 수립과 평가를 예산과정과 연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저출산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모색할 만하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저출산 원인은 범위와 그 효과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만으로는 효과성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대한민국정부, 2016: 35).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성과관리의 주요 대상으로 지역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한다. 즉, 저출산 분야의 성과관리체계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성과목표를 달성할 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젊은 세대의 취업지원

최근 청년들의 대학졸업이후 취업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취

업을 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게 되고 그에 따라 만혼화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직업은 결혼에서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준비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 늦추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인은 궁극적으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지역의 기업과 대학의 수요를 반영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청년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이후에도 고용의 불안정 상태는 결혼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문화를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고령화 대책 분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시의 경우 2003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군의 경우 2007년에 초고령사회로 넘어갔으며, 대도시안에 속해있는 구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⁹⁾ 이러한 환경변화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위한 정책들을 사전적 및 예방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보다는 대전광역시의 시각에서 종합적 계획과 더불어 실천가능한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순은(2017)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제와 대응방안은 종전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패러다임에 기초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혁신과 방법만이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

9) 이경은·김순은(2014)에 의하면 2012년을 기준으로 9개의 시와 63개의 군이 초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2015년에는 대군(인구 6만 이상)과 소군(인구 6만 미만)만이 초고령사회였으나, 2030년 이 되면 도농형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특히 소군지역은 고령화율이 42.2%에 달해 지방정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지방행정의 종합적 계획수립으로 대전광역시의 인구구성의 특성과 현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행정수요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수립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의 노인인구비율은 2013년 9.8%에서 2017년 15.8%로 약 17.4%증가 하였는데, 이외에도 장기요양의 수요, 인지증 환자의 추이, 독거 및 단독세대 노인의 증가현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재원(2017)도 지방재정의 사회기반투자전략 수립과 전략재정체계 구축에 대해 주장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책임 영역이 분명히 설정 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정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을 지방에서 실천하는 위탁집행계획에 국한 되어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다양하고 양극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표준적인 계획으로는 전략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재정지출의 종합성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화 정책과 관련된 재정지출은 각 사업별 또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지출됨으로써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계획과 더불어 사업간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간 연계를 위하여 재정지출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민간부문과의 협력강화이다. 특히 노인복지 부문에서의 민간인력과 재원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지출의 증가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은(2017)은 지방행정의 서비스 공급체계의 확대와 관련하여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조(自助)는 가능한 한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노동, 자산, 연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분위기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와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직영방식을 민영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공조(共助)는 비공식적인 상호부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령 가족을 대신하여 건강한 고령자와 전업주부 또는 학생들이 고령자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자원봉사와 공동체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대전광역시도 관내의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자본의 축적과 더불어 재정지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조(公助)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하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전광역시의 정책수립에 있어 주안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고령화사회에서의 정책과제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중앙정부 중심의 고령화 사회 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화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과 영리와 비영리 기관들이 공존하는 복지혼합정책과 더불어 행정효율화와 성과책임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와 제도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더불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

저출산고령화는 현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예산이 중앙정부의 예산과 결부되어 있으며 의무 형태의 지출로서 자치단체의 수요는 물론 특성을 반영하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대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공통사업의 경우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약 4% 수준에 그치고 있어 거시적 측면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근시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는 대부분 경력단절여성 취업과 다문화지원 및 진로직업, 평생학습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분야 확대 및 지속적 재정투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정이 확보되어 투입된다면 다행이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의 재정운영방향을 재설정하여 연계와 통합의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재정운영방향의 제시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관점에 있어 현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는 대전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경제정책들과 연계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지역의 유출은 대전의 인구감소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소득과 정주여건 격차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김경근 외 2017). 젊은 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들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분산된 사회기반 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들을 집중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관련 재정과 저출산·고령화 재정의

연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효율적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은 집중화 및 공동화를 통한 효율화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상시설을 설정하고 이의 운영방안이 효율적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재정운영 방향이 모색되어야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 뿐만 아니라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공적주체들 간의 협력과 책임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연대와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성장동력과 대응기반은 비단 대전시만의 역할과 기능의 문제가 아니며, 대전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전시와 교육청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공적주체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성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계획 상의 예산분석에서, 대전시는 현재 평생교육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궁극적 성과를 위해서는 학교교육, 직장교육 등 모든 주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사업과 영역을 공유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재정운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재정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는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의 적절한 조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시적 성과를 위한 단기적 성과들도 중요하지만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근본적 사회정책들을 함께 고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들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때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근본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을 위한 재정확보와 투입방향 설정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6장

결론

1절 요약

2절 정책제언

6장 결론

1절 요약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투자되는 예산구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방재정 및 예산의 관점에서 대전시광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장은 인구구조변화의 파급효과 및 도시문제, 고령사회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등에 관해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3장은 한국과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의 2016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4장은 특·광역시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최근 5년(2013-2017년) 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예산을 분석하고,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주요 사업과 예산구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공통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3년에 503,047백만원(국비 50.4%:지방비 49.6%)이었던 것이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617,383백만원(국비 64.2%:지방비 35.8%)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둘째,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총계는 2103년에 78,384백만원이고,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263,837백만원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5장은 지방재정 및 예산제도의 관점에서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단기적인 과제는 사업주체별(시

청, 교육성, 자치구) 명확한 재정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사업집행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 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업예산의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책 분야는 저출산 대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강화하고,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고령화 대책을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는 대전시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대전시는 장기적인 관점에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이 분야의 사업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다문화 지원, 평생학습에 대한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절 정책제언

지방재정 및 예산의 관점에서 대전시광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별로 본청, 교육청으로, 자체사업의 경우는 본청, 자치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행계획상의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주체와 예산규모를 명확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공통과제로서 지역거버넌스 구축에 투자되는 재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자체사업의 경우도 몇몇 사업에 예산 배정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예산 또한 증액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정책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 최종 확정단계 이전에 민-관협의체(거버넌스)를 통한 심의 또는 회람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대전광역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의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에 매년 2,000억원대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부문별(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주요 5대 사업에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매년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부분의 사업예산에

“사업집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방정부는 시행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체계에 기초한 성과예산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말 차년도 시행계획 지자체 수립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다.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는 정책사업을 성과관리의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성과계획서-성과예산서-성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와 사업예산의 정책사업을 확실히 연계하여 편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목표는 합계출산을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때 저출산 대응정책은 아동·교육·여성·고용정책과 예산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주체로서 지역사회 전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여섯째, 지방정부는 지역의 기업과 대학의 수요를 반영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청년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이후에도 고용의 불안정 상태는 결혼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문화를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방정부는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재정지출에 있어서 종합성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화 정책과 관련된 재정지출은 각 사업별 또는 부서별로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지출됨으로써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과 더불어 사업간 연계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사업간 연계를 위하여 재정지출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

여덟째,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지역의 유출은 대전의 인구감소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소득과 정주여건 격차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성장동력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는 대부분 경력단절여성 취업과 다문화지원 및 진로직업, 평생학습 등에 집중 투자되고 있지만, 대전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강성원(20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삼성경제연구소.
- 강은나(2016).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6.2, 29-37.
- 경남발전연구원(2009a). 경남의 가족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 경남발전연구원(2009b).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 경제협력개발기구(2005).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 고승한(2015). 일본 가와사키시의 고령사회대응 정책과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제244호: 3-15.
- 국회여성특별위원회(2001). 저출산시대의 여성정책, 국회여성특위 정책자료집.
- 국회예산정책처(2009).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 권태환(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경근 외(2017).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김민수(2016).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서강법률논총, 5(1): 129-153.
- 김민재(2009).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김선자(2010). 서울의 저출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리포트」, 1-18.
- 김수영·이민홍·손태홍(2015). 고령자 사회참여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451-479.
- 김순은(2017).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지방행정연구, 31(1) : 3-34.
- 김애경·박정우(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3(4): 195-239.
- 김은경(2016).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지방복지재정정책, EU학연구, 21(2) : 83-118.
- 김은경 외(2016).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재정정책 방향, 경기연구원 기본과제.

- 김준영·안용비(2014). 일본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시사점, 「한국은행」.
- 김한구(2004).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박근수·김태일(2016).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부모부양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468-479.
- 박승민(2016). 한국 정부의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2016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1-49.
- 박영삼(2016). 한눈에 보는 사회상 2016, 한계레, 2016년 10월 21일.
- 박이택(20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광역권 인구이동, 「아세아연구」, 55(2): 168-200.
- 박종서(2016).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 지속발전 가능성 강화전략, 보건복지포럼, 18-28.
-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지자체 수립지침.
- 선우덕·김상철·임주연(2006).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송태민·이중순(2010).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통계 서비스 현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5호 : 106-117.
- 신윤정(2009).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149호: 104-115.
- 오영화·김경래·유혜영(2008).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월드리서치(2008).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 유영성·임영광(2012).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

- 「정책연구」, 제39권 : 1-155.
- 유재국(2015). 균형 인구 산정과 정책적 함의, NARS 현안보고서, 제285호: 1-49.
- 유진성(2016).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 이 효(2015). 지방자치단체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쟁점 및 방향, 지방자치 FOCUS, 제93호 : 3-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경은·김순은(2015).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9(2) : 297-325.
- 이동희(2016). 청년층과 고령층의 서비스업 일자리 현황과 시사점, 월간 KIET산업경제, 제212호: 21-34.
- 이만우(2016).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62호.
- 이명환(2003).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 이복수(20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한국행정과 정책 연구」, 7(2): 225-241.
- 이부형(2016),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VIP 리포트, 통권 660호: 1-21.
- 이삼식·윤홍식(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호(2008).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247-265.
- 이재원(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지방행정연구, 31(1) : 35-59.
- 임성일·이효(2016).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10(2) : 107-135.
- 정성호(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정인환·김택(2010). 한국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치관 정립과 지방정부 정책연구, 도시행정학보, 23(3): 3-29.
- 조용준(2016). [시니어 컬럼]우리는 고령사회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건축,

60(6): 66-67.

- 조창현·한형서·임종현·최길수(20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구축 방안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0-7호: 1-40.
- 차홍봉(2015).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 보건복지포럼, 2015.5, 2-4.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2015). [긴급좌담회]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토론회자료집, 2015.12.18.
- 최길수(2014). 인구구조의 변화와 도시거버넌스의 구축, 대전발전포럼, 제48호, 39-57.
- 최길수·한형서(2011). 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3(1), 189-217.
- 최길수·허철행(2016). 지방정부의 고령화문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2016년도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431-449.
- 최성일 외 3인(2009).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승철·김규현(2012).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3(1): 513-521.
- 최웅선(2016). 인구고령화가 충청남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 방안,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 최종암(2008). 저출산·고령사회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진혁(2016).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정부기능과 지방재정의 대응역할에 관한 연구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재정(6), 62-91.
- 현대경제연구원(2016).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황남희(2016). 한·중·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233호: 101-113.